

2026년 국정감사 일일 종합 심층보고서

질의의 쟁점을 데이터로, 기관 답변을 검증 과제로, 후속 약속을 실행관리로

자료 성격

공통 정책 검토자료
공식 회의록 대조 전

분석 기준일

2026-10-07

문서 구분

일일 통합 심층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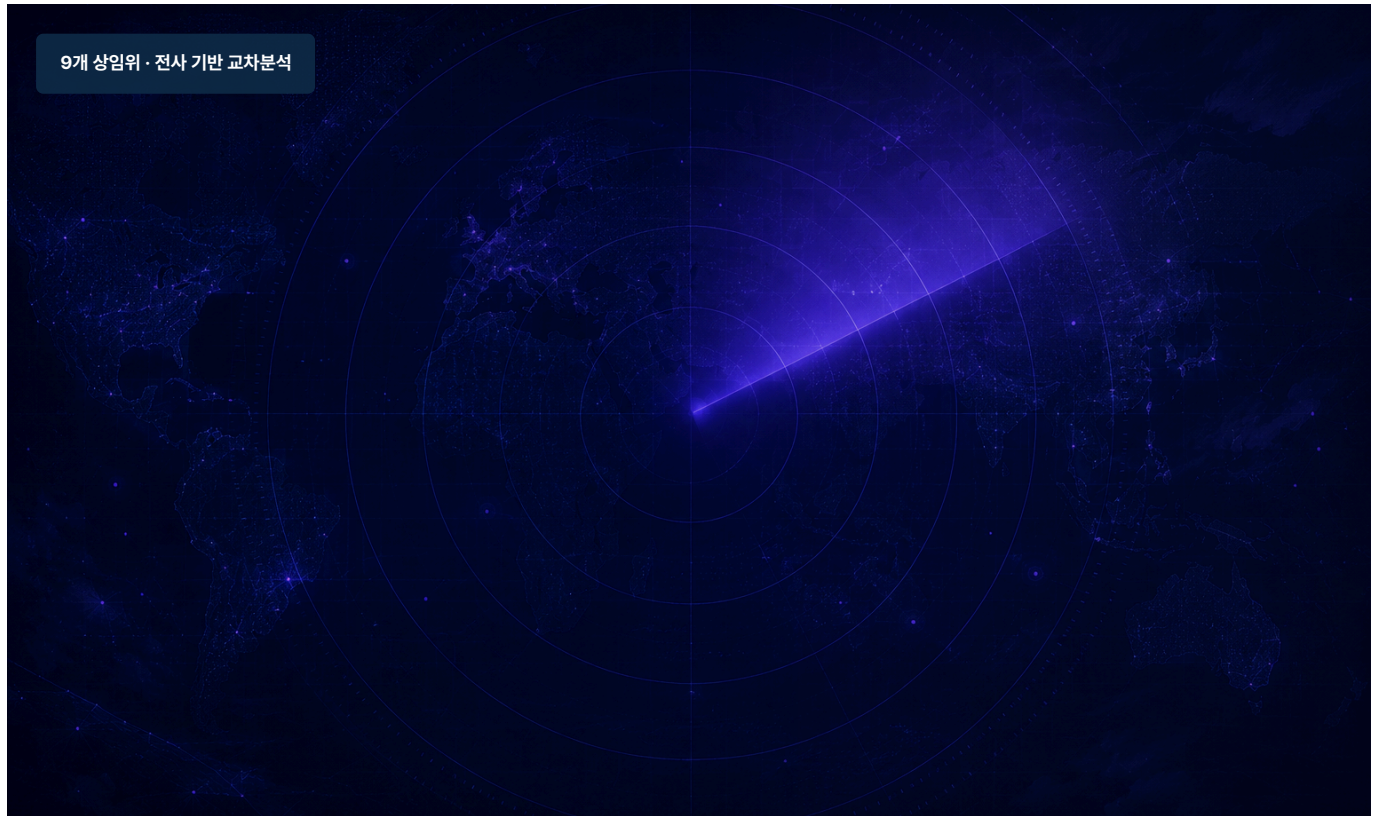
A4 배포용

2026년 10월 7일 수요일 국회방송 공식 영상 16편을 상임위별로 통합하고, 주요 쟁점·질의답변·후속조치를 정리했습니다. 자료에 제시된 주장과 기관 답변을 구분해 읽고, 실제 적용 전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이 보고서를 읽는 법

각 핵심 사실은 '외통위 1부 · 07:18:19'와 같은 근거표시로 추적합니다. 표시를 누르면 원본 영상의 해당 시각으로 이동하며, 영상 ID는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개 상임위 · 전사 기반 교차분석



공식 자막 및 Whisper 전사 → 영상별 구조화 분석 → 상임위별 통합 → 공통 의제 정리

16

분석 대상
공식 영상

9

통합 분석
상임위원회

156

구조화된
핵심 쟁점

196

추적 대상
후속조치

목차와 분석 기준

01	1. 일일 핵심 판단
02	2. 범상임위 교차 의제
03	3. 정책 리스크와 기회
04	4. 상임위별 심층 분석
05	5. 통합 이행 추적표
06	부록 A. 분석 대상 및 데이터 품질

보고서의 판단 단위

질의자의 문제 제기는 '주장', 피감기관의 발언은 '답변', 전사와 복수 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근거', 후속 검토사항은 '분석적 제언'으로 구분했습니다.

근거표시 읽는 법

'외통위 1부 · 07:18:19'처럼 위원회·영상 구분·시각을 표시합니다. PDF에서 누르면 원본 영상의 해당 시각으로 이동합니다.

분석 범위

16개 공식 영상
9개 상임위원회
YouTube 자막 5편
Whisper 전사 11편

교육위원회 · 국방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사용 시 유의사항

자동 전사는 숫자·고유명사·발언자 식별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 법적 판단, 대외 발표 전에는 국회 공식 회의록과 원본 영상을 재확인하십시오.

일일 종합분석

2026년 10월 7일 수요일 · 16편 · 9개 상임위

재정렌즈 · 공통판

전사 근거 자동대조

사람 검토 필요

16/16

원천자료 완전성

499/499

영상 인용 유효성

57/158

주장·전사 자동대조

39/129

수치 근거 자동대조

자동대조에서 101건을 사람 검토 대상으로 분리했으며, 국회 공식 회의록 공개 후 최종 대조가 필요합니다.

- 분석 범위: 9개 상임위원회 · 16개 공식 영상
- 전사 구성: YouTube 자막 5편 · Whisper 11편
- 통합 근거: 구조화 쟁점 156건 · 주요 문답 197건 · 후속조치 196건
- 판독 원칙: 질의·답변·확인 사실·분석적 시사점을 구분하고 모든 중요 판단을 원본 영상 시각으로 추적

1. 일일 핵심 판단

2026년 10월 7일 국정감사는 **제도 설계와 집행 역량의 괴리**가 정책 실패의 공통 패턴으로 드러났다. 교육위는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이 53분간 먹통된 후에야 장관 보고가 이뤄진 초동 대응 실패를 확인했고 [교육위원회 2부 · 03:11:29](#), 농해수위는 농지 전수조사를 제도 정비 없이 착수해 농지값 35.6% 폭락과 거래량 61% 급감을 초래한 순서 오류를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부 · 07:33:53](#). 국방위는 북한의 MDL 이남 지뢰매설을 2023년 9월 파악했으나 윤석열 정부 당시 조치하지 않아 2024년 9월 폭발 사고로 이어진 관리 공백을 추궁했다 [국방위원회 1부 · 05:49:49](#).

예산과 조직의 비대칭도 심각했다. 보건복지위는 국민체육진흥기금 3조원 잉여금을 기재부가 '형평성'을 이유로 사용 제한하면서 농지관리기금은 수입 27% 감소에도 사업비 58% 증액한 이중 잣대를 폭로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부 · 07:37:28](#). 산업위는 청년창업사관학교가 16년간 9,300명 배출·토스 등 유니콘 기업 창출에도 예산 전액 삭감된 반면, 모두의창업 사업은 2,631억원 추경 전용 후 5,000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대조를 지적했다 [산자중기위 전체 · 00:43:05](#), [산자중기위 전체 · 06:09:15](#).

법과 현실의 충돌은 정책 신뢰를 훼손했다. 문체위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JYP와 체결한 페노메논 계약서에서 해외 상표권을 민간에 일방 귀속하고 날짜 미기재·제재 조항 부재 등 허점을 남긴 채 계약서 유출 경위 공방으로 감사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목격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부 · 08:37:39](#). 통일위는 '평화적 두 국가론'이 헌법 제3조(영토조항)와 양립 가능한지, '북향민' 명칭이 탈북민 정체성과 충돌하는지 법리 검토 없이 추진된 점을 비판했다 [외통위 전체 · 06:49:47](#), [외통위 전체 · 08:22:15](#).

부처 간 협업 부재는 정책 공백을 키웠다. 행안위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후 중기부·과기정통부·복지부 모두 설치를 파악과 점검을 하지 않는 주무부처 공백을 확인했고 [행안위 전체 · 08:38:19](#), 국토위는 LH 민간참여사업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의무 적용 여부를 두고 LH와 중기부가 법 해석을 달리하며 대립한 사례를 지적했다 [산자중기위 전체 · 06:54:12](#). 이는 정책 설계 단계부터 집행 주체 간 합의가 부재했음을 보여준다.

2. 범상임위 교차 의제

2.1. 청년 정책의 파편화와 실효성 부족

관련 상임위: 교육위·산업위·문체위·행안위 **공통점:** 청년창업사관학교 예산 전액 삭감 [산자중기위 전체 · 00:43:05](#), 예술강사 1,200명 이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부 · 07:20:15](#), 시간선택제 공무원 79.5%가 주 40시간 근무 희망하나 제도 미개선 [행안위 2부 · 02:54:40](#) 등 청년 일자리·교육·문화 정책이 예산 삭감과 제도 경직으로 후퇴 중 **답변 차이:** 산업위는 "16년 동문 네트워크는 수천억을 주더라도 다시 만들 수 없다"며 명맥 유지 약속 [산자중기위 전체 · 00:43:38](#), 문체위는 "가을 국회에서 안정된 예산 확보 노력"이라는 원론적 답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부 · 01:48:02](#), 행안위는 "행안부와 협의 후 검토"로 책임 회피 [행안위 2부 · 02:58:04](#) **남은 과제:** 청년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로 부처별 대응이 파편화. 교육부·중기부·문체부·인사처 간 청년 일자리·교육·문화 통합 로드맵 수립 및 예산 국회 증액 여부 검증 필요

2.2. 지역 필수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관련 상임위: 보건복지위·국토위·농해수위·산업위 **공통점:** 중부권 암환자 30% 수도권 이동·치료가능사망률 격차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4:13:43](#), 전국 미분양 71% 비수도권 집중 [국토교통위원회 1부 · 06:45:00](#), 통합돌봄 인구감소지역 23곳 방문진료 제공기관 부재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7:54:03](#), 벤처기업 64.9%·벤처캐피탈 88.9% 수도권 집중 [산자중기위 전체 · 08:06:42](#) 등 의료·주거·돌봄·산업 전 분야 지역격차 심화 **답변 차이:**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정책금융 지원 제도와 약속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7:38:10](#), 국토부는 영일만 횡단대교 "KDI 설득 노력 중" [국토교통위원회 2부 · 02:16:21](#),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부담률 상향 "적극 논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부 · 08:07:03](#), 중기부는 지방시대 펀드 수도권 투자 40% 문제에 구제 대책 미제시 **남은 과제:** 5권 3특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선언에 그치고 예산·인력 배분은 수도권 중심 지속.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614억원·지방시대 펀드 1조200억원 등 배분 기준과 집행 투명성 점검, 국토부·복지부·중기부·농식품부 간 지역균형발전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2.3.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반복과 책임 소재 불명

관련 상임위: 교육위·산업위·문체위 **공통점:** 대전교육청 구글 워크스페이스 75,000건 유출 [교육위원회 1부 · 01:31:37](#), 모두의창업 5,000명 이메일·아이디어 유출 [산자중기위 전체 · 06:09:15](#), 티빙 4천만 건 유출 후 보상 부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부 · 07:21:16](#), 정책자금 민간건설업 업체의 중기부 로고 도용·개인정보 판매 [산자중기위 전체 · 05:00:03](#) 등 공공·민간 플랫폼 전반에서 유출 반복 **답변 차이:** 교육부는 "구글 측 책임 확인 중" [교육위원회 1부 · 01:33:20](#), 중기부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정신 차리겠다"며 재조사 약속 [산자중기위 전체 · 06:12:32](#), 문체부는 티빙 사태에 "민간 사안"으로 소극 대응 **남은 과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과징금·형사처벌 강화에도 사고 재발. 공공기관 민간 플랫폼 위탁 시 보안성 검토 의무화, 유출 사고 후 피해자 통지·보상 기준 법제화, 과기정통부·행안부·개인정보보호위 간 사전 예방 체계 구축 여부 검증 필요

2.4. 북한 위협 대응의 부처 간 온도차

관련 상임위: 국방위·외교통일위·산업위 **공통점:** 북한 MDL 이남 지뢰매설을 2023년 9월 파악했으나 조치 지연 [국방위원회 1부 · 05:49:49](#), 9월 지뢰 사고 후 NSC에서 외교부는 독자 제재 제안·통일부는 "실효성 약하다"며 반대 [외통위 전체 · 01:19:41](#), 중국 원전 방사능 유출(삼중수소 일본의 6배)에는 침묵 [산자중기위 전체 · 04:52:27](#) **답변 차이:** 국방부는 "단호한 대응" 약속 [국방위원회 1부 · 00:18:00](#), 통일부는 "평화공존 정책과 제재는 양립 불가" [외통위 전체 · 09:18:57](#), 산업부는 "수산물 안전 검역은 특정 국가 아닌 시스템 운영" [산자중기위 전체 · 04:54:01](#) **남은 과제:** 대북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로 국방부·외교부·통일부 간 입장 불일치 노출. 북한 MDL 침범 17회(2025년)·국경선 요새화 2028년 완성 목표 상황에서 정전협정 체제 실효성 재검토, 중국 원전 방사능 유출 대응 매뉴얼 마련, NSC 내 대북 정책 조율 메커니즘 강화 필요

2.5. 공공기관 관리·감독 부실과 민간 특혜

관련 상임위: 교육위·국토위·문체위·산업위 **공통점:** 수시 원서접수 대행사(진학사·유웨이)가 수집 데이터로 유료 합격예측 서비스 판매 [교육위원회 2부 · 03:56:29](#), LH 민간참여사업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의무 회피 [산자중기위 전체 · 06:54:12](#), 페노메논 프로젝트 상표권 JYP 선취득·해외 상표권 전적 귀속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부 · 07:40:04](#), 2019년 국토부·한국부동산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국토교통위원회 1부 · 01:32:01](#) **답변 차이:** 교육부는 "원서접수 공공 체계 전환 검토" [교육위원회 1부 · 05:32:38](#), 국토부는 "확인 후 적절한 조치" [국토교통위원회 1부 · 01:23:13](#), 문체부는 "계약서 재정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부 · 07:42:39](#), 중기부는 "국토부·중소기업중앙회와 협의" [산자중기위 전체 · 06:59:05](#)로 책임 분산 **남은 과제:**

공공기관이 민간에 업무 위탁 후 관리·감독 방기. 대행사 데이터 활용 수익 사업 규제, 민간참여사업 공공성 기준 명확화, 계약서 투명성 확보, 민간인 사찰 책임 소재 규명 등 제도 개선 및 후속 조치 이행 점검 필요

2.6. 재정 운용의 형평성 논란

관련 상임위: 교육위·문체위·농해수위·보건복지위 **공통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적용 시 서울 2조7천억·경기 7조4천억 감소 예상

교육위원회 2부 · 01:45:00, 국민체육진흥기금 3조원 잉여금 사용 불가 vs 농지관리기금 수입 27% 감소에도 사업비 58% 증액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부 · 07:37:28,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50% vs 다른 현금성 지원 80~9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부 · 08:06:41**, 장기요양 비용

지방정부 100% 부담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6:34:05** **답변 차이:** 교육부는 "재정당국과 논의 안 했다" **교육위원회 2부 · 02:24:06**, 문체부는 "사업 타당성

설득 못 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부 · 07:39:32**, 농식품부는 "국비 비율 상향 적극 논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부 · 08:07:03**, 복지부는 "복지부-

행안부-기재부 협의"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6:34:05** **남은 과제:** 기재부가 '형평성'을 이유로 특정 기금·사업 예산 제한하나 기준 불명확. 교부금·기금·

보조금 배분 원칙 재정립, 지방 재정 부담 완화 방안 마련, 기재부 예산 심의 투명성 제고 필요

3. 정책 리스크와 기회

리스크 1: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재발 가능성 (위험도 상, 발생 가능성 중)

영향: 2027년 1월 정시 원서접수 시 시스템 장애 재발 시 50만 수험생 피해, 대입 공정성 신뢰 붕괴 **조기경보:** 교육부·대교협·대행사 TF 구축 여부, 매뉴얼 보완 및 모의훈련 실시 여부(정시 전 완료 약속) **교육위원회 1부 · 04:38:36**, 공공 원서접수 체계 전환 일정(2028학년도 목표)

교육위원회 1부 · 05:32:38 **근거:** 9월 11일 UAE Apply 시스템 장애 53분 후 장관 보고, 전날 유사 장애에도 조치 없이 재발, 경쟁률 유출 범위 미파악

교육위원회 2부 · 03:11:29, **교육위원회 1부 · 00:53:05**

리스크 2: 농지 전수조사 후폭풍 (위험도 상, 발생 가능성 상)

영향: 284만 필지 위반 의심 분류로 농지값 35.6% 폭락·거래량 61% 급감·담보대출 연체 4조540억원 증가, 농민 강제 매각 우려로 농촌 경제 붕괴 가능 **조기경보:** 특별조치법 2026년 연내 제정 여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부 · 05:44:59**, 농지은행 예산 추가 확보 및 대기 물량(3,320필지·26~27개월) 해소 여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부 · 04:59:42**, 농지값·거래량 추이 **근거:** 제도 정비 없이 조사 착수한 순서 오류, 농지은행 예산 68% 삭감 후 20% 증액에 그쳐 수용능력 부족, 처분명령 농지 중 10년간 3건만 매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부 · 07:57:18**

리스크 3: 북한 MDL 침범 및 우발적 충돌 (위험도 상, 발생 가능성 중)

영향: 북한 MDL 침범 2024년 9회→2025년 17회 급증, 국경선 요새화 2028년 완성 시 정전협정 체제 붕괴, 우발적 충돌 시 전면전 확전 가능

조기경보: 유엔사와 MDL 좌표 재확인 협력 가속화 여부 **외통위 전체 · 08:32:30**, 군통신선 복원 추진 여부, 북한 지뢰 추가 제거 작전 실시 여부

국방위원회 1부 · 00:18:00 **근거:** 2023년 9월 MDL 이남 지뢰매설 파악했으나 조치 지연, 2024년 9월 폭발 사고 발생, 국방부·외교부·통일부 간 대북 제재 입장 불일치 **국방위원회 1부 · 05:49:49**, **외통위 전체 · 01:19:41**

리스크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교육 격차 심화 (위험도 상, 발생 가능성 중)

영향: 2027년 개편안 적용 시 서울 2조7천억·경기 7조4천억 등 각 교육청 예산 대폭 감소, 인건비·급식비 증가분(3조5천억) 고려 시 실질 감소로 지역 교육 격차 심화 **조기경보:** 학령인구 2035년 초등·2040년 중등 반등 시점 반영 여부 **교육위원회 2부 · 02:24:06**, 국회 예산정책처와 계산 결과 차이 검증, 2030년부터 교부금 인상률이 공무원 보수인상률 미달 여부 **교육위원회 2부 · 02:27:59** **근거:** 장관이 재정당국과 학령인구 반등 논의 안 했다고 답변, 준비 부족 자인 **교육위원회 2부 · 02:24:06**

리스크 5: 분만취약지 확산과 소아청소년과 붕괴 (위험도 상, 발생 가능성 상)

영향: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70곳 이상 분만실 제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2022년 3,307명→2026년 82명 급감, 산부인과 1,020명→81명 급감으로 지역 필수의료 붕괴 **조기경보:** 계약형 필수의료사제·신설 의사제 도입 일정, 의료인력 네트워크 구축 여부 **보건복지위원회 2부 · 02:20:12**, 분만취약지 추가 확산 여부 **근거:** 경기 광주시(인구 42만) 분만 청구실적 2018년 140건→2024년 34건(75.7% 급감), 과천시 등 수도권까지 확산

보건복지위원회 2부 · 02:19:05

리스크 6: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반복 (위험도 중, 발생 가능성 상)

영향: 대전교육청 75,000건, 모두의창업 5,000명, 티빙 4천만 건 등 유출 반복으로 국민 개인정보 보호 신뢰 붕괴, 2차 피해(보이스피싱 등) 확산

조기경보: 공공기관 민간 플랫폼 위탁 시 보안성 검토 의무화 여부, 유출 사고 후 피해자 통지·보상 기준 법제화 여부, 과기정통부·행안부·개인정보보호위 간 사전 예방 체계 구축 여부 **근거:** 교육부는 "구글 측 책임 확인 중", 중기부는 "정신 차리겠다"는 원론적 답변으로 재발 방지 대책 부재 **교육위원회 1부 · 01:33:20**, **산자중기위 전체 · 06:12:32**

리스크 7: 청년 정책 파편화와 일자리 감소 (위험도 중, 발생 가능성 상)

영향: 청년창업사관학교 예산 전액 삭감, 예술강사 1,200명 이탈,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 확대 미개선 등으로 청년 일자리·교육·문화 정책 후퇴, 청년 유출 가속화 **조기경보:** 청년창업사관학교 예산 국회 복원 여부 **산자중기위 전체 · 00:43:38**, 예술강사 예산 확대 및 국비 전환 여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부 · 01:48:02, 시간선택제 공무원 주 40시간 확대 제도 개선 여부 **행안위 2부 · 02:58:04** 근거: 부처별 대응 파편화(산업위 "명맥 유지", 문체위 "예산 확보 노력", 행안위 "행안부 협의"), 청년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리스크 8: 공공기관 민간 특혜와 관리·감독 부실 (위험도 중, 발생 가능성 중)

영향: 원서접수 대행사 데이터 유료 판매, LH 민간참여사업 중소기업 제품 구매 의무 회피, 페노메논 상표권 JYP 귀속 등 공공기관이 민간에 특혜 제공하며 공공성 훼손 **조기경보:** 원서접수 공공 체계 전환 일정(2028학년도) **교육위원회 1부 · 05:32:38**, LH 민간참여사업 판로지원법 적용 여부

국토부·중기부 협의 결과 **산자중기위 전체 · 06:59:05**, 페노메논 계약서 재정리 및 해외 상표권 정부 지분 확보 여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부 · 07:42:39**

근거: 교육부·국토부·문체부 모두 "확인 후 조치" "협의 중"으로 책임 분산,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은 증인 "기억 안 남" 답변으로 실제 규명 불발

국토교통위원회 1부 · 07:52:02

4. 상임위별 심층 분석

당일 분석 대상과 각 상임위의 중심 의제는 다음과 같다. 이어지는 각 장은 1·2부 전사, 구조화 쟁점, 개별보고서를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한다.

- **4.1. 교육위원회:** 2편 · 2부·1부 · 쟁점 31건 · 후속조치 26건
- **4.2. 국방위원회:** 2편 · 2부·1부 · 쟁점 14건 · 후속조치 22건
- **4.3. 국토교통위원회:** 2편 · 2부·1부 · 쟁점 16건 · 후속조치 20건
- **4.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편 · 2부·1부 · 쟁점 16건 · 후속조치 23건
- **4.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편 · 1부·2부 · 쟁점 16건 · 후속조치 22건
- **4.6. 보건복지위원회:** 2편 · 1부·2부 · 쟁점 16건 · 후속조치 24건
- **4.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편 · 단일 영상 · 쟁점 23건 · 후속조치 34건
- **4.8. 외교통일위원회:** 1편 · 단일 영상 · 쟁점 8건 · 후속조치 7건
- **4.9. 행정안전위원회:** 2편 · 2부·단일 영상 · 쟁점 16건 · 후속조치 18건

4.1. 교육위원회

감사 범위와 핵심 판단

2026년 10월 7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를 대상으로 1부(약 8시간 46분)와 2부(약 4시간 13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핵심 쟁점은 9월 11일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 [교육위원회 2부 · 03:11:29](#), AI 디지털 교과서(AIDT) 추진 과정의 법적 문제와 2,260억 원 국가배상 소송 [교육위원회 1부 · 01:20:0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교육위원회 2부 · 01:45:00](#), 서·논술형 수능 도입 논란 [교육위원회 2부 · 03:00:15](#), 정보교사 부족 [교육위원회 1부 · 04:44:45](#), 특수학교 설립 지연 [교육위원회 1부 · 04:49:37](#) 등이었다.

최고진 교육부 장관은 수시 사태 관리감독 미흡을 인정하고 공공원서접수 체계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교육위원회 1부 · 05:32:38](#), 서범수 의원은 장애 발생 53분 후에야 장관 보고가 이루어진 점, 장관이 집에서 보고받고 출근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위원회 2부 · 03:11:29](#).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서·논술형 수능 도입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답했으나 [교육위원회 1부 · 05:40:55](#),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 본회의 심의 없이 포함된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었다 [교육위원회 1부 · 07:44:26](#).

쟁점별 심층 분석

1.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교육부 대응 9월 11일 17시 50분 유웨이어플라이(UAE Apply) 시스템 장애 발생 후 18시 04분 대교협이 교육부에 보고했으나 장관 보고는 18시 43분에 이루어졌다 [교육위원회 1부 · 00:52:28](#). 서버 운영체제 변경 후 호환성 점검·부하 테스트 미실시, 전날(9월 10일) 유사 장애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재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위원회 1부 · 04:51:45](#). 접수 마감 연장 중 일부 대학 경쟁률이 공개되어 공정성 논란이 발생했으며, 교육부는 3건 접수 취소 권고했으나 커뮤니티·SNS를 통한 경쟁률 유출 가능성은 파악하지 못했다 [교육위원회 1부 · 00:53:05](#). 장관은 정시 전까지 메뉴얼 보완, 난수번호 발행 등 경쟁률 유출 방지 방안을 종합감사 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위원회 1부 · 01:40:07](#).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교육예산 감소 우려 서범수 의원은 2027년 개편안 적용 시 서울 2조7천억, 경기 7조4천억, 세종 3천2백억, 울산 7천5백억 등 각 교육청 예산이 대폭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원회 2부 · 01:45:00](#). 최고진 장관은 현행법대로 하면 100조가 되나 개편안은 76조로 현재 73조보다 3조 증가한다고 반박했으나 [교육위원회 2부 · 01:46:10](#), 의원들은 인건비·급식비 증가분(3조5천억)을 고려하면 실질 감소라고 주장했다. 김희정 위원장은 학령인구가 2035년부터 초등학교 수가 다시 증가하는 국가통계를 개편안이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원회 2부 · 02:24:06](#), 장관은 재정당국과 그렇게까지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변해 준비 부족을 드러냈다.

3. 서·논술형 수능 도입의 공정성 및 사교육 우려 박정은, 장동혁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추진하는 수능 서·논술형 도입에 대해 채점의 객관성·공정성 문제, 사교육 증가 우려를 제기했다 [교육위원회 2부 · 03:00:15](#). 국가교육위 자체 용역보고서(2024, 2025)에서도 '채점 실효성 문제로 공정성 논란 가능성'을 지적했다, 일본이 도입 추진 후 포기한 사례가 있다 [교육위원회 2부 · 03:01:19](#). 김준혁 의원은 2024→2025년 논술 사교육비가 300억 원 증가한 사례를 들어 이론과 현실의 괴리를 지적했다 [교육위원회 1부 · 02:03:11](#). 차정인 위원장은 채점 기준표를 만들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 한다고 답했으나 [교육위원회 2부 · 03:02:29](#),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 본회의 심의 없이 포함된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어 [교육위원회 1부 · 07:44:26](#) 독단적 추진 우려가 증폭되었다.

4. 정보교사 부족과 디지털 교육 기반 취약 2024년 중학교 정보교과 시수 34→68시간 확대 예정이나 국공립중 2,668곳 중 정보교사 정원 1,774명, 163곳은 교사가 없다 [교육위원회 1부 · 04:44:45](#). 순회교사 651명 중 73명이 3곳 이상 담당하며, 지역격차가 심각하다(전북 중학교 157곳 중 정원 43명) [교육위원회 1부 · 04:47:30](#). 양성 대학 9곳, 정원 200명 미만으로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 한병도 의원은 교육과정은 교사가 있는 교실에서 완성되는데 가르칠 의무는 국가가 정하고 가르칠 사람은 매년 협의에 맡기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교육위원회 1부 · 04:47:30](#), 장관은 연도별 확충 목표 수립을 약속했다 [교육위원회 1부 · 04:49:03](#).

5. 특수학교 설립 지연과 국가 책임 구조 부재 특수교육 대상자가 2022년 10만→2026년 12만 명(4년간 2만 명 증가)이나 특수학교는 7곳만 증가했다 [교육위원회 1부 · 04:49:37](#). 전국 시군구 169곳에 특수학교가 없으며, 서울 동진학교·경남 나래학교는 2012년 추진 시작 후 15년이 소요되었다 [교육위원회 1부 · 04:50:41](#). 부지 확보 및 주민 설득이 주요 지연 원인이나, 목표는 교육부가 세우고 실행은 시도교육청·지자체에 맡기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었다 [교육위원회 1부 · 07:07:01](#). 장관은 복합형·병설형 모델 확산, 국가 책임 구조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주요 질의·답변과 입장 차이

수시 사태 보고 체계 서범수 의원은 17시 50분 장애 발생 후 18시 43분에야 장관 보고가 이루어진 이유를 추궁했다 [교육위원회 2부 · 03:11:29](#). 장관은 "메일로 해서 일단락됐다고 보고받았다"고 답했으나 [교육위원회 2부 · 03:13:05](#), 의원은 "집에서 보고받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슨 간이 그렇게 크냐"며 초기 대응 미흡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김희정 위원장은 학령인구가 2035년부터 초등학생 수가 다시 증가하는 국가통계를 개편안이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원회 2부 · 02:24:06](#) . 장관은 "그렇게까지는 논의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열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답했으나, 준비 부족을 자인한 셈이 되었다.

서·논술형 수능 도입 절차 김희정 위원장은 7월 대통령 업무보고 시 수능 논술형 도입 등 내용이 본회의 심의·합의 없이 보고되었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원회 1부 · 07:44:26](#) . 차정인 위원장은 "7월 본회의에 공론화 계획 보고했으며, 공론화 전 본회의 심의하면 공론화 의미 없다"고 답했으나, 국가교육위원들은 '본회의 거론 없음', '보고 절차 미비', '효능감 저하'를 비판해 내부 불협화음이 드러났다.

정보교사 확충 한병도 의원은 "정보교사 없는 중학교 163곳, 수업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질의했다 [교육위원회 1부 · 04:45:55](#) . 장관은 "순회교사 또는 기간제 활용 중이나 매우 부족한 현실. 연도별 확충 목표 수립하겠다"고 답했으나, 구체적 목표 수치나 일정은 제시하지 못했다.

확인된 약속·자료제출·후속조치

최고진 교육부 장관은 **수시 먹통 사태 관련 ①장관 일정·동선·보고 체계 ②캐리스 업무 법적 적법성 검토 ③국가배상 소송별 청구 내역 및 구상권 검토 계획을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위원회 1부 · 01:25:39](#) . **정시 원서접수 대비 ①매뉴얼 보완(마감일 당일 상황 포함) ②난수번호 발행 등 경쟁률 유출 방지 방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문서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교육위원회 1부 · 01:40:07](#) . **교육부·대교협·대행사 간 TF 구축, 원서접수 시스템 전반 재검토, 장애 대비 매뉴얼·전달체계·모의훈련 등 철저한 준비를 정시 원서접수 전(2027년 1월 4일)까지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위원회 1부 · 04:38:36](#) .

정보교사 연도별 확충 목표 수립, 종합감사 이전까지 국회 보고 [교육위원회 1부 · 04:49:03](#) , **대학 원서접수 공공 체계 전환, 빠르면 2028학년도(내년) 입시부터 적용 목표** [교육위원회 1부 · 05:32:38](#) , **특수학교 2030년까지 21개 설립 계획 차질 없이 추진** [교육위원회 1부 · 04:51:14](#) 등을 약속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교원정책(정보·AI 교원 확보 방안 포함) 반영, 이행 점검하겠다**고 했다 [교육위원회 1부 · 04:48:32](#) .

미해결 쟁점과 검증 필요사항

수시 사태 경쟁률 유출 범위는 교육부가 3건 접수 취소 권고에 그쳤으나, 커뮤니티·SNS를 통한 유출 가능성은 파악하지 못했다

[교육위원회 1부 · 00:53:05](#) . 접수번호를 통한 경쟁률 유출 가능성, 제3자 명의 허수 접수 문제도 사태 후에야 인지했다고 답변해

[교육위원회 2부 · 03:36:27](#) 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원서접수 대행사(진학사, 유웨이)가 수집 데이터를 활용해 유료 합격예측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도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위원회 2부 · 03:56:29](#)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의 학령인구 반등 미반영 문제는 장관이 재정당국과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변해 [교육위원회 2부 · 02:24:06](#) 정책 설계 단계부터 미흡했음이 드러났다. **정부 산식대로 하면 2030년부터 교부금 인상률이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경상경비를 감당 못 한다**는 지적에 대해 장관은 "저희 계산으로는 증가율이 그것보다 높은 걸로 나온다"고 답했으나 [교육위원회 2부 · 02:27:59](#) , 국회 예산정책처와 계산 결과가 다를 경우 검증이 필요하다.

서·논술형 수능 도입의 채점 공정성 담보 방안은 차정인 위원장이 "채점 기준표를 만들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 한다"고 답했으나

[교육위원회 2부 · 03:02:29](#) , 국가교육위 자체 용역보고서에서도 '채점 실효성 문제로 공정성 논란 가능성'을 지적했다 [교육위원회 2부 · 03:00:15](#) ,

일본이 도입 추진 후 포기한 사례가 있어 실효성 검증이 필요하다. **AI 채점의 QWK 0.8 수준 일치도에 대해서도 김준혁 의원이 공정성 논란 가능성, 약필 인식 문제 등을 제기했다** [교육위원회 1부 · 02:05:22](#) .

정보교사 확충 목표는 장관이 연도별 목표 수립을 약속했으나 [교육위원회 1부 · 04:49:03](#) 구체적 수치나 일정은 제시하지 못했다. 양성 대학 9곳, 정원 200명 미만으로 공급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위원회 1부 · 04:47:30](#) 2024년 중학교 정보교과 시수 34→68시간 확대를 어떻게 감당할지 불명확하다.

4.2. 국방위원회

감사 범위와 핵심 판단

2026년 10월 7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방부·국가정보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1·2부로 나누어 실시했다. 감사는 2024년 9월 25사단 DMZ 지뢰폭발 사고를 중심으로 북한의 MDL 이남 지뢰매설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 소형정찰·자폭드론 획득 과정,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군의관·군무원 처우 개선 등 다양한 국방 현안을 다루었다 **국방위원회 1부 · 00:07:31**.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약속했으나, 윤석열 정부 당시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방위원회 1부 · 00:08:04**. 국방부의 용산 청사 복기는 '비정상적 정상화'로 평가되었으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 국군사관학교 통합 등 중장기 국방 정책도 논의되었다.

쟁점별 심층 분석

북한 MDL 이남 지뢰매설 대응 논란 2024년 9월 21일 25사단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 사고와 관련, 국방정보본부는 2024년 4월 북한의 불모지 작업, 6월 지뢰 매설 정황을 포착했으나 MDL 이남 매설 여부는 2025년 9월에야 구체적으로 식별했다 **국방위원회 2부 · 02:06:29**. 유영원 의원은 2023년 9월 합참정보본부장이 안규백 장관에게 MDL 이남 지뢰매설 추정 지역 식별 사항을 보고했음에도 당시 정부가 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방위원회 1부 · 05:49:49**. 강신철 장관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며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나, 당시 상황 조치 추진과 남북 군사회담 제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유엔사에 5차례 공동조사를 요청했으나 유엔사는 현장 확인 전까지 정전협정 위반 판단을 유보했고, 결국 2025년 지뢰 폭발사고 이후 공동조사가 이루어졌다 **국방위원회 2부 · 02:03:07**. 천준호 의원은 북한군 지뢰매설 시기를 '12개월 이전'이라고 발표한 것이 1년 전일 수도 2년 전일 수도 있다는 의미냐고 추궁했고, 장관은 "최소한 1년이 되었다는 의미이며, 2024년 6월경 설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국방위원회 1부 · 07:14:32**. 국방부는 10월 5일 포민스 지뢰제거기로 50cm x 40m 재원에서 한 발 내지 두 발을 제거하는 작전을 실시했으나, 임종득 의원은 이를 '쇼'라고 비판하며 보다 단호한 대응을 요구했다 **국방위원회 1부 · 07:19:25**.

비무장지대 관찰권 및 유엔사 승인 절차 문제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지뢰 사고 현장 점검을 시도했으나 유엔군사령부의 비무장지대 출입 불승인으로 접근하지 못했다 **국방위원회 2부 · 02:11:25**. 위원장은 "우리 영토임에도 유엔사 승인 없이 활동할 수 없는 현실은 개탄스럽다"며,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권한은 한국 정부가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위원회 2부 · 02:12:31**. 북한은 자기를 판단으로 활개 치고 다니는데 우리는 유엔사 승인을 얻어야만 모든 일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방위원회 2부 · 02:13:36**. 강신철 장관은 "위원장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유엔사와 협력해 관찰권 행사 방안을 개선하겠다. 필요하면 입법적 검토도 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방위원회 2부 · 02:13:04**.

소형정찰·자폭드론 획득 과정 위법성 2020년 계약된 지뢰 탐지·제거 로봇(디펜사 180)이 방사청 보도자료에서는 'DMZ 통로 개척 가능'으로 홍보됐으나, 실제로는 험준 지형에서 작동 불가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국방위원회 2부 · 02:46:45**. 국방부 장관은 DMZ 투입이 어렵다고 답변했고, 유영하 의원은 3,039억 원 예산 낭비 가능성을 지적하며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방위원회 2부 · 02:48:21**. 황명선 의원은 2024년 소형정찰드론과 자폭드론 획득 과정에서 무기체계를 전력지원체계로 편입 분류하고, 예산 전용(3,100% 증액)을 통해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국방위원회 1부 · 07:27:03**. 24년 연내 획득을 목표로 성능검증, 시험평가를 생략하고, 방사청 심의를 우회했으며, 대안항공 자폭드론 1형은 성능 미달로 창고에 보관 중이다 **국방위원회 1부 · 07:30:16**. 장관은 "자폭드론은 무기체계로 볼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은 아니었다.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국방위원회 1부 · 07:28:10**. 정찰드론 사업의 총체적 부실과 은폐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하라는 요구가 있었다 **국방위원회 2부 · 02:27:09**.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지연 11월 SCM에서 FOC 검증 완료 및 전환 목표연도 건의 예정이나, 한미 간 조율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국방위원회 1부 · 06:33:41**. 강신철 장관은 "한미가 생각이 크게 이견이 없는 상황이나, 상대가 있는 동맹이기 때문에 조율이 더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국방위원회 1부 · 06:01:31**. 김병주 의원은 "20년간 준비해온 만큼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며, 미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연합사령부 편성은 합의되었으나 최종 결정은 FMC 평가 이후로 예정되어 있다 **국방위원회 1부 · 07:20:30**.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 절차 논란 광주군공항(제1전투비행단)은 2032년 12월 완공 목표로 이전 추진 중이며, 그 전까지 4년간 예천·서산·충주 3곳에 임시 분산배치할 계획이다 **국방위원회 2부 · 03:02:12**. 2027년 3,169억 원 예산이 반영됐으나, 선행연구 없이 예산이 먼저 반영되어 절차상 문제가 지적되었다 **국방위원회 1부 · 06:03:07**. 미군과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임시배치 지역 주민들의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국방위원회 1부 · 07:04:03**. 송영길 의원은 무안국제공항과 통합 배치하는 플랜B 검토를 제안했으나, 국방부는 "무안공항 통합 시 새 공항 건설 수준의 시간이 소요돼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며 현 계획대로 추진하되 일정 단축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국방위원회 2부 · 03:03:19**. 리베트먼트 방식의 임시배치는 방어력이 약하고, 음압시설이 없어 화생방 공격에 취약하다는 군사적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국방위원회 1부 · 07:22:10**. 대구·수원 등 다른 군공항 이전과의 형평성 문제도 논란이 되었다 **국방위원회 1부 · 08:08:07**.

주요 질의·답변과 입장 차이

송영길 의원은 9.19 군사합의로 인해 MDL 일대 공중정찰 제한으로 차폐가 발생하지 않았느냐고 질의했고, 강신철 장관은 "군사적 부분에서는 상대적인 부분이 있으며, 9.19 합의가 상호 실례에 의해 명확하게 이루어졌다면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그렇지 못했다. MDL 일대 공중정찰 제한으로 차폐 발생한 부분은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국방위원회 1부 · 01:49:53](#) . 한기호 의원은 북한이 MDL을 넘어 지뢰를 매설하고 중앙분계선 표지판을 제거한 것은 과거 3.7 작전과 유사한 유도 작전 아니냐며 작전 계획 공개의 적절성을 지적했고, 장관은 "작전보안에 대한 지적 유념하겠다. 경고사격 방식도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방위원회 1부 · 05:36:59](#) . 강선영 의원은 북한의 MDL 침범과 지뢰매설이 방어가 아닌 공격·도발 목적이며 대북확성기 방송이 효과적인 대응 수단 아니냐고 질의했으나, 장관은 "도발이라는 점에 동의하나, 대북확성기 방송은 과거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북한이 학습효과로 인해 현재는 효과가 제한적이다"고 답변했다 [국방위원회 1부 · 07:41:13](#) . 천하람 의원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취지(국익선양)가 시대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점진적 축소가 아닌 전면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장관은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목표이나, 비인기 종목 선수들의 경력 단절 문제 등 보완책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방위원회 1부 · 06:31:01](#) .

확인된 약속·자료제출·후속조치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MDL 이남 북한 지뢰를 북한이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 제거 작전을 시행하고, 유엔사와 협의하여 추가 지역도 조사하고 제거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방위원회 1부 · 00:18:00](#) . 11월 SCM에서 FOC 검증 평가를 완료하고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건의하며, 한미가 긴밀히 협의하여 신뢰가 보장된 가운데 전작권 전환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위원회 1부 · 06:33:41](#) . 병역특례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궁극적으로 폐지하고, 로드맵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방위원회 1부 · 01:11:43](#) . 소형정찰·자폭드론 획득 과정의 회의록, 참석자 명단, 보고문서 일체를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정식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방위원회 1부 · 07:28:41](#) . 군의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를 빨리 만들어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위원회 1부 · 08:04:26](#) . 군무원 처우 개선(주택수당, 명칭 변경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방부 공보라인의 답변 기준 매뉴얼을 만들어 '확인 후 답변' 사항을 리스트로 관리하여 실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방위원회 1부 · 08:15:15](#) , [국방위원회 1부 · 08:19:45](#) . 비무장지대 관찰권 행사 방안을 유엔사와 협력해 개선하고 필요 시 입법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위원회 2부 · 02:13:04](#) . 지뢰 사고 군인 간병인 지원 방안을 다른 방안으로 보완하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며, 통합 국군사관학교 세부 방안을 조속히 정리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방위원회 2부 · 02:29:50](#) , [국방위원회 2부 · 02:58:40](#) . 합참은 북한 MDL 일대 지뢰 매설 관련 정보 판단 경위를 다음 날(10월 8일) 합참 국정감사에서 상세 보고하기로 했다 [국방위원회 2부 · 02:17:18](#) .

미해결 쟁점과 검증 필요사항

북한의 MDL 이남 지뢰매설 시기와 윤석열 정부 당시 대응 부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유용원 의원이 제기한 2023년 9월 합참정보본부장의 보고 이후 조치 여부에 대해 강신철 장관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했으나, 구체적 확인 결과는 제시되지 않았다 [국방위원회 1부 · 05:49:49](#) . 천준호 의원이 지적한 지뢰매설 시기 '12개월 이전' 표현의 모호성도 해소되지 않았으며, 2024년 6월경 설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답변은 정보 파악의 한계를 드러냈다 [국방위원회 1부 · 07:14:32](#) . 소형정찰·자폭드론 획득 과정의 위법성과 12·3 내란과의 연관성 의혹은 감사원 감사 청구 검토로 넘어갔으나, 구체적 일정과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위원회 1부 · 07:28:10](#) .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의 미군 협의 미완료, 주민 동의 절차 부재, 대구·수원 등 다른 군공항 이전과의 형평성 문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에 그쳤다 [국방위원회 1부 · 08:09:47](#)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구체적 시기와 미국과의 조율 내용은 11월 SCM 이후로 미뤄졌으며, 한미 간 이견이 크지 않다는 장관의 답변과 달리 실제 전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국방위원회 1부 · 06:01:31](#) . 군의관 정원 감소(2027년 1,180명)와 응급구조사 배치의 임시방편성, 군무원 처우 개선의 구체적 로드맵도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위원회 1부 · 08:03:51](#) , [국방위원회 1부 · 08:14:32](#) .

4.3. 국토교통위원회

감사 범위와 핵심 판단

2026년 10월 7일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LH·한국부동산원·공항공사·KDI 등을 대상으로 1·2부 통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핵심 쟁점은 ▲서울 아파트 86주 연속 상승과 전월세 동반 급등으로 인한 주거불안 심화 ▲2019년 국토부·한국부동산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문건 최초 공개 ▲LH 구조적 적자와 공공주택 재원 확보 ▲지방 미분양 급증과 건설경기 침체 ▲경북 영일만 횡단대교·동대구~포항 광역철도 등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 ▲가덕도 신공항 공사비 증액 지연 ▲KDI 예비타당성조사 독점 운영 문제 등이다 [국토교통위원회 2부 · 02:06:03](#) [국토교통위원회 1부 · 01:05:26](#) .

쟁점별 심층 분석

1. 부동산 정책 실패와 주거불안 김정재 의원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6주 연속 상승(역대 최장)하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 들어 매매 14.73%, 전세 6.7%, 월세 8.9% 상승으로 6개 정권 중 처음으로 3가지 모두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위원회 1부 · 01:05:26](#) . 대출규제로 자기자금 비중이 48.8%→65.5%로 급등하여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30대 지지율 78.8% 부정평가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1부 · 05:21:13](#) . 홍시선 장관은 "토지거래허가제를 12월 말까지 연장하고, 연말까지 상승률 폭이 줄어들 것"이라 답했으나 [국토교통위원회 1부 · 01:11:06](#) , 공급 중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다.

2.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김은혜 위원이 2019년 11월 작성된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을 최초 공개했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지시로 한국감정원(현 부동산원) 주택통계부가 민주당 정부 부동산정책 비판 민간인 19명의 발언을 수집하고, RHMS(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를 통해 부동산 자산을 불법 조회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토교통위원회 1부 · 01:32:01](#) [국토교통위원회 1부 · 07:47:20](#) . 이명석(당시 주택정책과장, 현 부산지방항공청장), 이동환(당시 주택통계부장, 현 부동산원 이사장) 증인은 "기억 안 난다" "무슨 문건인지 모르겠다"며 일관되게 부인했다 [국토교통위원회 1부 · 07:51:01](#) [국토교통위원회 1부 · 07:52:02](#) . 홍 장관은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약속했으나 [국토교통위원회 1부 · 01:23:13](#) , 구체적 조사 일정과 책임 소재는 불명확하다.

3. LH 구조적 적자와 공공주택 재원 은정복 의원은 LH가 2026년 임대사업 손실 3조 1743억 원, 총 단기순위 1조 2600억 원 손실 예상, 부채 200조 초과·이자비용 3조 원 등 구조적 적자 상황을 지적했다. 00주택은 평당 실제 분양가가 사업원가보다 34만 원 낮아 적자 구조이며, 건설임대 1채당 2.8억, 매입임대 3억 부채가 발생한다 [국토교통위원회 2부 · 02:06:03](#) [국토교통위원회 2부 · 02:09:19](#) . 홍 장관은 "구조적 손실은 LH 경영 방안이 아니라 정부 정책 호응 및 저렴한 공공임대 공급 때문이며, 정부 재정당국이 구조적 문제 해결 지원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함께 고민하겠다고 답했으나 [국토교통위원회 2부 · 02:10:53](#) , 구체적 재정 지원 방안과 시기는 제시되지 않았다.

4. 지방 미분양 급증과 건설경기 침체 전국 미분양 48,758호 중 71%(34,618호)가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고금리·공사비 상승으로 중견·중소 건설사가 유동성 위기에 처하고, 지역경제가 최악 상황이다 [국토교통위원회 1부 · 06:45:00](#) [국토교통위원회 1부 · 06:46:05](#) . 수도권은 공급 부족, 지방은 공급 과잉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정부 대책이 수도권 중심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5. 경북 영일만 횡단대교·동대구~포항 광역철도 김정재 의원은 영일만 횡단대교가 KDI 사업타당성 재검토 중이며, 재정뿐 아니라 정책성·지역균형발전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서해안·남해안 해상교량(장보고대교, 칠산대교, 천사대교 등)은 경제성이 낮아도 지역균형발전 이유로 추진됐으나, 동해안은 단 하나도 없다며 해상노선 추진을 요청했다 [국토교통위원회 2부 · 02:14:11](#) [국토교통위원회 2부 · 02:16:21](#) . 홍 장관은 "KDI 설득 및 지역사정 반영 노력 중"이라 답했다. 동대구~포항 광역철도(101km)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수립 중이며, 경북 우선순위 2순위로 확인됐다. 장관은 "경제성·지역균형발전 등 검토 중, 관심 갖고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국토교통위원회 2부 · 04:22:54](#) .

6. 가덕도 신공항 공사비 증액 지연 정동만 의원은 2024년 2월 중동전쟁 이후 건설원가가 급등했으나 정부 대책이 4개월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 대신 특별법 개정 방침으로 전환하여 건설사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10월 예비계약 체결이 불투명하다 [국토교통위원회 1부 · 08:17:49](#) [국토교통위원회 1부 · 08:18:25](#) .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정부 확약을 요구하고 있으며, 홍 장관은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이 어려워 특별법 개정 추진 중, 건설사와 MOU 체결 검토"라 답했다 [국토교통위원회 1부 · 08:19:09](#) .

7. KDI 예비타당성조사 독점 운영 정희령 의원은 철도사업 예타 95%를 KDI가 독점하고, 원칙 12개월이나 실제 2년 소요되며, 인천 송도 부개역 연장(1.74km) 등 지역 숙원사업 예타 통과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침 미준수 의혹(지하철도 토지보상비 과다 산정, 상주인구 누락 등)과 지자체·국토부 의견 수렴 미흡 문제가 제기됐다 [국토교통위원회 1부 · 08:21:32](#) [국토교통위원회 1부 · 08:26:20](#) . 김세직 KDI 원장은 "합리적 자료와 근거 있으면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답했으나 [국토교통위원회 1부 · 08:34:05](#) , 구체적 개선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주요 질의·답변과 입장 차이

- **LH 재정 지원:** 은정복 의원 "구조적 적자 국가 책임" ↔ 홍 장관 "재정당국과 함께 고민" (구체적 방안·시기 미정) [국토교통위원회 2부 · 02:10:53](#)

- **영일만 횡단대교**: 김정재 위원 "지역균형발전 고려 해상노선 추진" ↔ 홍 장관 "KDI 설득 노력 중" (확정 여부 불명) **국토교통위원회 2부 · 02:16:21**
- **민간인 사찰**: 김은혜 위원 "블랙리스트 문건 공개" ↔ 이명석·이동환 증인 "기억 안 남" (책임 소재 불명) **국토교통위원회 1부 · 07:47:20**
- **가덕도 공사비**: 정동만 위원 "정부 확약 필요" ↔ 홍 장관 "특별법 개정 추진" (예비계약 시기 불투명) **국토교통위원회 1부 · 08:19:09**

확인된 약속·자료제출·후속조치

- 홍지선 장관: LH 구조적 손실 재정당국과 함께 고민, 지원 방안 검토 (기한 미정) **국토교통위원회 2부 · 02:10:53**
- 홍지선 장관: 영일만 횡단대교 KDI 설득 및 지역사정 반영 노력, 해상노선 추진 검토 (기한 미정) **국토교통위원회 2부 · 02:16:21**
- 홍지선 장관: 동대구~포항 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포함 검토, 경제성·지역균형발전 고려 (2026년 내 5차 철도망 수립)
국토교통위원회 2부 · 04:22:54
- 홍지선 장관: 민간인 사찰 의혹 문건 확인 후 적절한 조치 (기한 미정) **국토교통위원회 1부 · 01:23:13**
- 홍지선 장관: 청년·신혼부부 비아파트→아파트 주거상향 추적관찰 영역 실시 (기한 미정) **국토교통위원회 1부 · 05:21:11**
- 홍지선 장관: 도심공공복합사업 사전기획협의체 조속 개최, 연내 별도 보고 (연내) **국토교통위원회 1부 · 05:27:36**
- 임낙코 현대건설 본부장: 삼성역 철근누락 보강부위 하자담보책임 5년→10년 연장, 정밀안전진단 비용 부담, 문서화하여 의원실 제출 (기한 미정)
국토교통위원회 1부 · 07:58:58
- 홍지선 장관: 고속·시외버스 필수노선 지원 확대 및 경쟁력 강화 방안 검토 후 보고 (조만간) **국토교통위원회 2부 · 03:27:50**

미해결 쟁점과 검증 필요사항

- **민간인 사찰 책임 소재**: 이명석·이동환 증인의 "기억 안 남" 답변으로 실제 규명 불발. 국토부 내부 조사 및 김현미 전 장관 보고 여부 확인 필요
국토교통위원회 1부 · 07:52:02
- **LH 재정 지원 구체화**: 구조적 적자 해결 위한 정부 재정 지원 규모·시기·방식 미정. 기획재정부 협의 결과 추적 필요 **국토교통위원회 2부 · 02:10:53**
- **영일만 횡단대교 노선 확정**: KDI 재검토 결과 및 해상노선 vs 육상노선 최종 결정 시기 불명. 국토부 주도권 행사 여부 검증 필요
국토교통위원회 2부 · 02:16:21
- **가덕도 공사비 증액 시기**: 특별법 개정 국회 일정 및 건설사 MOU 체결 여부 불투명. 10월 예비계약 체결 가능성 추적 필요
국토교통위원회 1부 · 08:19:09
- **KDI 예타 지침 준수**: 인천 송도 부개역 등 지침 미준수 의혹에 대한 KDI 자체 점검 및 문책 여부 확인 필요 **국토교통위원회 1부 · 08:21:32**

4.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감사 범위와 핵심 판단

2026년 10월 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1·2부 통합 8시간 이상 진행된 감사의 최대 쟁점은 **농지 전수 조사**로, 여야 의원 모두 준비 부족과 농민 불안 가중을 강력히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부 · 05:21: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부 · 07:32:50**. 송미령 장관은 투기 목적 외 일반 관행 위반은 처분하지 않고 특별조치법으로 양성화하겠다고 반복 해명했으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부 · 05:44:59**, 의원들은 농지값 폭락(2022년 대비 35.6% 하락), 거래량 급감(61% 감소), 담보대출 연체 증가(4조540억원) 등 실질 피해를 들어 조사 중단 또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부 · 07:33:53**. 이 외에도 계란 가격 담합 논란, 농어촌 기본소득 재정 부담, 영농형 태양광 제도 미비, 중국산 드론 보안 문제, CPTPP 가입 우려 등이 집중 질의되었다.

쟁점별 심층 분석

1. 농지 전수 조사 부작용과 농지은행 수용능력 부족 2024년 2월 대통령 지시로 시작된 농지 전수 조사가 284만 필지를 위반 의심으로 분류하면서 농민들이 강제 매각 우려로 불안해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부 · 05:21:20**. 이재관 의원은 적합·부적합 이분법적 분류가 정책 목적에 맞지 않고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으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부 · 05:47:47**, 강승규 의원은 농지값 폭락과 거래 중단, 담보대출 문제 등 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부 · 07:33:53**. 장관은 현행 농지법상 부적합이지만 처분하지 않고 특별조치법으로 양성화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의원들은 제도 정비를 먼저 하지 않고 조사를 시작한 순서 오류와 홍보 부족을 비판했다.

농지 전수 조사 대책으로 제시된 농지은행의 실제 수용능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 물량이 3,320필지(일부 지역 26~27개월 대기)이며, 2024년 농지은행 예산은 68% 삭감되었다가 2027년 20% 증액에 그쳤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부 · 04:59:4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부 · 05:22:57**. 조승환 의원은 처분명령 농지 중 최근 10년간 단 3건만 매입되었고, 매입 대상도 농업진흥구역 경지정리 논 중심(94~96%)으로 편중되어 실제 농민 수요와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부 · 07:57:18**. 신장식 의원은 농지은행·농지연금·농업금융 대기 물량이 2~3년치 쌓여 있는데 대책 없이 진행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으며, 장관은 내년 농지은행 예산을 25% 증액하고 농지연금도 역대 최고치로 높였으나 충분하지 않아 국회에서 추가 확보하겠다고 답변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부 · 06:21:03**.

2. 계란 가격 담합 논란 및 산란계협회 해산 2025년 3월 계란 가격 급등 시 농식품부가 산란계협회를 공정위에 담합 조사 의뢰하고 협회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부 · 05:03:00**. 그러나 실제 산지가격 인상은 6.7%에 불과했고, AI 발생(전년 대비 80% 증가), 이동제한, 수입란 부족 등 공급 부족 요인이 명확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부 · 06:05:27**. 임미애 의원은 산란계협회 담합 조사 과정이 폭력적이었고, 가격 인상 요인을 부풀려 담합으로 몰았다고 비판하며 생산자와 왜 싸우는지 질의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부 · 06:11:45**. 장관은 산란계 농가 마리당 순수익이 12,561원으로 높고 신규 농가도 증가하고 있어 산업기반 와해가 아니라고 반박했으나, 의원들은 소규모 농가 자구책을 담합으로 몰고 방역 정보 공유도 차단하는 등 생산자와 싸우는 행태이라 비판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부 · 06:26:55**. 협회 해산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상태다.

3. 농어촌 기본소득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 2025년 17개 군 시범사업(2조3305억원)을 2026년 35개 군으로 확대 예정이나, 기초지자체 재정자립도 평균 8.6%로 매우 낮아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부 · 05:38:25**. 문금주 의원은 지자체들이 보건·안전·SOC·농업경쟁력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기금·잉여금까지 동원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 중이며, 국비 부담률이 50%로 다른 현금성 지원(80~90%)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부 · 08:06:41**. 전국 확대 시 18조원(10년 175조원) 소요 예상된다. 의원들은 대통령 공약을 지자체에 떠넘기지 말고 국비 비율을 70~80% 이상으로 높이거나 국가 직접 지급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으며, 장관은 지방 부담이 크다는 점 공감하며 정부 안에서 국비 비율 상향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부 · 08:07:03**.

4. 중국산 드론 보안 문제 농지 전수 조사에 투입된 드론 103대 중 94대(91%)가 중국 DJI사 제품으로, 소프트웨어는 러시아산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부 · 04:43: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부 · 01:28:20**. 김영태 의원은 농식품부가 보안조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DJI 앱의 '로컬 데이터 모드(LDM)' 기능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드론·소프트웨어·규격서에 대한 보안성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부 · 06:57:4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부 · 01:29:23**. 국토정보 촬영에 중국 회사 버튼 하나에 보안을 의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의원은 중국산 드론 사용 즉각 중단과 촬영 자료 관리 체계 점검을 요구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부 · 01:30:25**. 장관은 중국산 드론이므로 소프트웨어라도 국내산으로 바꾸겠다고 답변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부 · 01:30:57**.

주요 질의·답변과 입장 차이

이상현 의원은 농지 전수 조사를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했는지 질의했고, 장관은 직접 교감은 없었으나 작년 12월 업무보고 시 농지 개혁 필요성을 보고했다고 답변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부 · 05:21:51**. 이양수 의원은 농지 전수 조사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농 출신 인사들의

영향력이 과도하지 않은지, 토지공개념 철학이 반영된 것 아닌지 질의했으나, 장관은 개인 사상이 정책에 반영되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부인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부 · 06:49:43** . 주철현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시행령이 주민참여협동조합에 과도한 환원 의무를 부과하고 조합원 배당을 환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으며,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을 전제로 한 조항이라 설명했으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부 · 07:37:33** . 이성권 의원은 브라질산 소고기 수입 협상 중인데 BSE(광우병) 발생 사례가 많고 통보 지연 사례도 있어 국민 불안 우려를 제기했으며, 장관은 자료를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고 통보 지연 시 즉각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부 · 07:41:10** .

확인된 약속·자료제출·후속조치

송미령 장관은 농지 전수 조사 관련 특별조치법을 2026년 연내 제정하고, 일반 관행 위반은 양성화하며 투기 목적만 처분하겠다고 약속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부 · 05:44:59** . 농지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농지은행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했으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부 · 06:22:33** , 농지 전수 조사 결과 소팅 후 제도 개선·입법 정리 내용을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들에게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부 · 01:37:17** . 중국산 드론 소프트웨어를 국내산으로 교체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부 · 01:30:57** , CPTPP 가입 시 농업 전후방 파급효과, 중소농·지역별·품목별 영향을 분석하여 원점 재검토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부 · 07:00:00** . 브라질산 소고기 수입 관련 BSE 검사 자료를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고 통보 지연 시 수입 즉각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부 · 07:42:14** , 영농형 태양광 시행령의 주민참여협동조합 환원 의무 규정을 재검토하고 절대농지와 일반농지 차등 적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부 · 07:39:08** .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부담률 상향을 정부 내에서 적극 논의하고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한 차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부 · 08:07:03** .

미해결 쟁점과 검증 필요사항

농지 전수 조사의 근본적 순서 오류(제도 정비 선행 없이 조사 착수)와 농지은행 수용능력 부족 문제는 특별조치법 제정과 예산 증액 약속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검증이 필요하다. 농지값 하락 후 혈값 매입 의혹, 농지은행 상담 과정 거절 통계 미제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부 · 07:56:47** , 농지 전수 조사 착수 후 신규 위탁 3만99건 중 위반 의심 및 비농업인 필지 조사 결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부 · 01:07:29** 등이 종합감사까지 제출 예정이다. 계란 가격 담합 논란은 협회 해산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상태로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며, 산란계 농가 56.6%가 5만수 미만 소규모인데 대규모화·스마트화 정책만 추진하고 소규모 농가 대책은 전무하다는 지적이 남아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부 · 08:16:10** .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부담률 상향 논의 결과와 지자체 재정 여건 차등 지원 방안 구체화 여부도 검증이 필요하다.

4.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감사 범위와 핵심 판단

2026년 10월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1·2부로 나누어 실시했다. 감사는 K-컬처 산업 육성,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 예술인 권리 보장, 청소년 보호, 문화유산 관리 등 문화·체육·관광 전 분야를 망라했다.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수렴된다. 첫째, 대중문화교류위원회와 JYP 엔터테인먼트 간 '페노메논(Phenomenon)' 프로젝트 계약서에서 상표권이 민간에 일방적으로 귀속되고 계약 조건이 불투명한 문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부 · 07:40:04](#), 둘째,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창작의 자유와 역사 왜곡 논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부 · 01:10:1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부 · 01:35:58](#), 셋째, 국민체육진흥기금 3조원 잉여금 미사용 문제와 예술인 강사 예산 부족 등 재정 운용의 형평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부 · 07:36:25](#)이다. 감사 말미에는 계약서 유출 경위를 둘러싼 여야 간 격렬한 공방으로 회의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부 · 08:37:39](#).

쟁점별 심층 분석

1. 페노메논 프로젝트 상표권 및 계약 투명성 문제

배현진·조은희 의원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2025.10.1) 당일 JYP가 '페노메논' 국내 상표권을 단독 출원하고 이후 미국·일본·멕시코 등 해외 상표권도 선점한 사실을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부 · 07:40:04](#). 2026년 4월 문체부와 JYP 간 '권리 일부 양도 계약서'가 체결되었으나, 계약서에는 날짜 미기재, JYP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임의 조항(권리 이전을 '할 수 있다'는 표현), 계약 불이행 시 제재 조항 부재 등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부 · 07:41:05](#). 특히 국내 상표권은 5대5 지분이나 해외 상표권은 JYP에 전적 귀속되고, 박진영 위원장이 직책수당·법인카드를 사용한 점이 특혜 논란을 불렀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부 · 02:13:1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부 · 02:42:05](#). 최영 장관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조직 미비로 시급성 때문에 JYP가 출원 후 정부에 양도하기로 했으나,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계약서 등 허점 발생"했다며 계약서를 재정리하고 해외 상표권도 정부 지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부 · 07:42:3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부 · 02:13:12](#). 그러나 계약서 유출 경위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감사가 중단되어 근본적 해결 방안은 논의되지 못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부 · 08:37:39](#).

2. 영화 '암살자들' 창작의 자유 vs 역사 왜곡 논쟁

김석기 의원은 영화가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박정희 대통령 관여 가능성과 연결해 역사를 왜곡했다며, 문세광의 북한 공작원 진술·사형 직전 참회 등 팩트를 생략하고 음모론을 부각해 관객을 오도한다고 지적하며 허진호 감독 등 제작진의 국감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부 · 01:24:4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부 · 01:35:58](#). 진선미 의원은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이라 반대하며, 배우 집 앞 시위 등 물리적 위협에 대한 정부 보호 조치를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부 · 01:42:10](#). 최영 장관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 사전검열 금지로 정부는 창작물 내용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다양성·상상력·창의성 보호가 문체부 소명"이라 입장을 표명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부 · 02:01:3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부 · 02:04:42](#). 위원장은 "영화 내용으로 창작자를 국회에 부르는 일은 간사 합의가 있어도 허락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부 · 06:05:16](#). 창작의 자유와 역사적 사실 존중 사이의 균형점을 찾지 못한 채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3. 국민체육진흥기금 3조원 잉여금 사용 불가 문제

이호경 의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잉여금이 3조원을 돌파했으나 문체부는 단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부 · 07:36:25](#). 기획재정부는 '타 기금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같은 기간 농지관리기금은 수입이 27% 감소했음에도 사업비를 58% 증액하고 공자기금 예탁금 2조3천억원을 인출해 사용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부 · 07:37:28](#). 이호경 의원은 "3조1천억이면 대형 아레나 2개, 국민체육센터 100개를 지을 수 있는 예산"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부 · 07:38:31](#). 최영 장관은 "사업의 타당성과 긴급성을 재정당국에 설득하지 못한 것"이라 인정하고 기금 활용 방안 마련 및 재정당국 협의 강화를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부 · 07:39:32](#). 그러나 구체적 사용 계획이나 기재부와 협의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4. 편곡자 저작권료 30년간 미지급 문제

이정문 의원은 음악저작권협회가 편곡자를 저작자로 등록하고 분배규정에 12분의 2 지분을 인정하고 있으나, 노래방·공연·음반 등에서는 실제 지급하지 않고 그 몫을 작곡자·작사자에게 배분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부 · 06:01:4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부 · 06:02:11](#). 정경천 참고인(편곡자)은 "노래방 반주기 제작 시 원곡 편곡을 그대로 카피했다"고 증언했으나, 협회는 "편곡이 그대로 쓰였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부 · 06:02:11](#). 이시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장은 "30년 전 합의였으며, TFT와 공청회를 통해 개선 노력 중"이라 답변했으나, 작곡가·작사가·편곡자 간 합의 도출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부 · 06:04:50](#). 문체부는 2006년부터 시정명령을 부과했으나 진전이 없어, 예술인 권리 보호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5. 청소년 보호 및 문화교육 정책 미흡

이호경 의원은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고, 도박 경험 청소년 50%가 12세 이전 시작, 2025년 불법 온라인 도박 상담 청소년 5,838명(전년 대비 40% 증가), 10대 마약 사범 2025년 67명으로 2019년 대비 3배 증가한 실태를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부 · 07:18:1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부 · 07:19:13** . 유튜브에서 마약을 소재로 한 노래(펜타닐 등 실제 약물명 언급)가 성인인증 없이 1,500만 뷰를 기록한 사례도 제시되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부 · 07:19:13** . 이호경 의원은 "예술가사 1,200명이 떠났고, 방과후 스포츠클럽·예체능 프로그램을 늘려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부 · 07:20:15** . 최영 장관은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개선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으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부 · 08:56:34** , 예술인 강사 인건비를 국비로 전환하지 못해 기획사업 예산 증액에도 강사 수가 줄어들고 내년 봄 고용 유지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에는 "가을 국회에서 안정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부 · 01:47:0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부 · 01:48:02** .

주요 질의·답변과 입장 차이

페노메논 계약서 논란: 배현진 의원은 "JYP가 갑, 문체부가 을인 계약"이라 비판했으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부 · 07:41:05** , 박진영 위원장은 계약서상 갑을 구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은희 의원은 "해외 상표권을 민간기업에 다 넘길 대담한 계약"이라며 "앞으로 일을 하실 때 아마추어처럼 하지 말고 프로처럼 하라"고 질타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부 · 02:42:05** . 장관은 계약서 재검토를 약속했으나, 계약서 유출 경위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감사가 중단되어 근본 원인 규명은 미완으로 남았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부 · 08:37:39** .

양표 방지법 실효성: 정연욱 의원은 양표 방지법 시행(8월 28일) 후에도 중국 사이트·외국 플랫폼(스터브허브)에서 티켓+굿즈 끼워팔기 등 편법 거래가 계속되고, 신고→문체부→경찰 수사 단계가 길어 골든타임을 놓친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부 · 01:31:32**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부 · 01:33:44 . 장관은 "3만 건 차단, 170명 수사 의뢰했고 해외 플랫폼 대책을 빨리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으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부 · 01:34:52 , 윈스톱 대응 체계 구축 일정은 제시하지 못했다.

청소년 언론 법적 지위: 조개원 의원은 미성년자가 신문·인터넷신문 발행인·편집인이 될 수 없어 청소년 독립언론(토끼폴 등)이 법적 보호·우편요금 감면·선거보도 등에서 배제되는 반면, 가짜뉴스 매체(스카이드일리)는 정식 등록 언론으로 혜택을 받는 모순을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부 · 01:27:0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부 · 01:28:08** . 장관은 "언론단체 의견 수렴, 해외 사례 조사 후 공론화하고 본격적으로

다루겠다"고 답변했으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부 · 01:30:58** , 구체적 개선 방향은 제시하지 않았다.

광화문 헌판 한글 병기: 조은희 의원은 2023년 2억 8659만 원으로 설치한 헌판을 정권마다 바꾸려 한다면, 법률검토·사전협의 없이 대통령 보고부터 한 절차를 비판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부 · 01:49:05** . 장관은 "여론조사 결과 6대4로 병기 우세하나 강행할 수 없고, 내년까지 광범위한 의견 수렴 후 방향을 잡겠다"고 답변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부 · 01:51:55**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부 · 01:52:26** . 문화유산 정책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과제로 남았다.

확인된 약속·자료제출·후속조치

최영 장관은 ▲페노메논 프로젝트 JYP와의 상표권 계약서 재정리 보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부 · 07:42:39** ▲편곡자 저작권료 분배 개선을 위해

음악저작권협회와 적극 협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부 · 06:05:17** ▲대한축구협회 국제경기 승인 특혜 의혹에 대해 문체부 차원 조사 실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부 · 07:46:48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및 보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부 · 07:16:07** ▲국민체육진흥기금

활용 방안 마련 및 재정당국 협의 강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부 · 07:39:32** ▲백제 세계유산 관광콘텐츠화 종합전략을 국가유산청과 공동 수립

(종합감사 이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부 · 07:49:55** ▲예술가사 지원 사업 예산 확대 및 교육부 연계 학교 예체능 확대 방안 마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부 · 08:56:34 ▲웹소설 실태조사(연말 완료 예정)와 공정위 협력, 표준계약서 마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부 · 01:46:26** ▲광화문

헌판 한글 병기는 내년까지 광범위한 의견 수렴 후 방향 결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부 · 01:52:26** ▲민간자격증 실태조사 실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부 · 01:55:14 ▲친일반민족행위자 서훈 11명 14점 전수조사·재검토 및 행안부 회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부 · 02:02:44** ▲표준영정

고증 오류는 12월 새 심의위 구성 후 단계적 해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부 · 02:35:38** ▲e스포츠 체육 포함을 위한 대책 마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부 · 02:50:47 ▲파크골프장 표준 모델 개발 연구를 12월까지 완료해 지자체에 배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부 · 02:18:42** ▲뉴토끼

사건을 저작권법뿐 아니라 불법도박·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엄단하고 클라우드플레이어와 협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부 · 03:04:28**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대부분 약속에 구체적 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이행 점검이 필요하다.

미해결 쟁점과 검증 필요사항

첫째, 페노메논 프로젝트 계약서 유출 경위와 책임 소재가 규명되지 않았다. 여야는 계약서 유출이 국회 보좌진의 정당한 정보 확보인지, 절도인지를 놓고 격렬히 대립했으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부 · 08:37:39** , 감사 중단으로 진상 규명이 중단되었다. 둘째, 국민체육진흥기금 3조원 잉여금 사용 제한의 법적·정책적 근거가 불명확하다. 기재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들었으나 농지관리기금 등 타 기금은 예외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부 · 07:37:28 , 문체부만 차별받는 이유가 해명되지 않았다. 셋째, 편곡자 저작권료 미지급 문제는 30년간 지속되었고 문체부가 2006년부터 시정명령을 부과했으나 진전이 없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부 · 06:04:50** , 정부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대한축구협회 국제경기 승인 특혜 의혹(쿠팡플레이시리즈 6개월 전 승인, 예치금 면제 등)은 경찰 수사가 종결되었으나 문체부 차원 조사가 약속되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부 · 07:46:48** , 공정성 검증이 필요하다. 다섯째,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도박·마약 노출 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이 부재하고, 예술강사 예산 부족으로 청소년 문화교육이 위축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부 · 07:18:1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부 · 01:47:00** , 교육부·여가부 등 관계부처 협력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4.6. 보건복지위원회

감사 범위와 핵심 판단

2026년 10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1·2부로 나누어 실시했다. 1부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 통합돌봄 시행 현황,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비급여 진료 관리,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을 다뤘고, 2부는 아동돌봄 체계 분산, 희귀질환 지정기준, 분만취약지 심화, 노인학대 통계 부재, 온열질환 감시체계,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614억원 편성과 국립대병원 육성을 통해 지역의료 격차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6:08:31 . 통합돌봄은 2026년 3월 시행 후 8월까지 93,000명이 신청했으나 지역별 서비스 연계율 격차(양구군 100% vs 속초시 38%)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6:24:03** . 분만취약지는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70곳 이상으로 확산되었으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2022년 3,307명에서 2026년 82명으로 급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2부 · 02:19:05** .

쟁점별 심층 분석

지역 필수의료 위기와 국립대병원 육성 이만희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 47개 중 14개만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있고, 영남대병원 등은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6:08:31** . 중부권 암환자의 30% 이상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며, 치료가능사망률도 수도권 12.49명 대비 중부권 13.11명으로 높다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4:13:43** . 10대 암수술 자체충족률은 중부권 35.3% vs 수도권 71.8%로 격차가 크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방안을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제도화하고,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를 5권 3특 지역별로 배치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7:38:10** ,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7:38:48** .

통합돌봄 시행 초기 지역격차 심화 2026년 3월 시행 후 8월까지 93,000명 신청, 79,000명 서비스 연계가 이뤄졌으나 지역별 격차가 심각하다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6:24:03** . 양구군은 평균 5일·연계율 100%인 반면 속초시는 35일·38%에 그쳤다.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는 8.1%에 불과하고, 인구감소지역 23곳 중 방문진료 제공기관이 아예 없는 곳이 다수다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7:54:03** . 전담인력 부족(82.4%가 격차)과 인프라 격차가 주요 원인이다. 복지부는 시군구별 실태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하고, 수요 대비 공급 부족 분야와 원인을 파악하여 지자체에 피드백하겠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6:24:48** .

사회복지사 처우 열악, 기본급 산정 문제 백선영 의원은 사회복지사 기본급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의 77% 수준(연봉 821만원 격차)이며,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기본급'에 정근수당·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가 포함되어 실제 본급은 최저임금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6:13:14** . 명절휴가비 수령률 51%, 시간외근무수당 67%, 가족수당 46%에 그친다. 근속연수는 3.7년으로 짧고, 30%가 노후 불안을 호소한다. 장관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책임이 있고 노력해야 하며, 국정과제로 가족수당·명절수당·시간외근무수당 공통 적용이 책정되어 있어 재정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6:54:46** .

비급여 진료 특정 기관 집중, 건보재정 누수 김윤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의 75%(9조원 규모)가 의원·병원급에서 발생하며, 상위 20% 의료기관이 80%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6:29:54** . 의학적 근거 없는 비급여가 절반 이상이며, 실손보험 가입자는 미가입자보다 건보진료비를 11조원 더 사용한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 후 신경차단술 등 대체 비급여가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장관은 비급여 관리 수단과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관리급여·표준화·가격공개 등으로는 한계가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6:55:50** .

희귀질환 지정기준의 의료비 편향과 배제 사례 김윤 의원은 희귀질환 지정기준 4·5호가 '진료비 부담이 적거나 산정특례 적용 시 지정 제외'로 되어 있어, 신청 610건 중 20%가 의료비 기준 미충족으로 탈락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회 2부 · 01:47:21** . c3사구체병, ij신장병증, 호산구성천식 등이 의료비 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제외되었으며, 비급여 고가 신약을 못 쓰는 환자는 의료비가 적게 나와 지정에서 배제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보건복지위원회 2부 · 01:48:23** . 장관과 질병청장은 지정기준 재검토와 정책연구용역 추진을 약속했다 **보건복지위원회 2부 · 01:49:30** .

분만취약지 심화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급감 소병훈 의원은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70곳 이상이 분만실 제로 상태이며, 과천시 등 수도권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회 2부 · 02:20:12** . 경기 광주시(인구 42만)는 분만 청구실적이 2018년 140건에서 2024년 34건으로 75.7% 급감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2022년 3,307명에서 2026년 82명으로, 산부인과는 1,020명에서 81명으로 급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2부 · 02:19:05** . 장관은 10년간 의사 확보가 어려워 계약형 필수 의사제, 신설 의사제, 의료인력 네트워크 구축 등 다각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주요 질의·답변과 입장 차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회피 문제 서영석 위원장은 영남대병원이 핵심역량질환군수·전원환자수용률·중증응급환자안정화치료를 등 평가지표 미달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회피했으며, 대구 지역 최상급 병원임에도 경영상 이익 부족을 이유로 공공 역할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2부 · 03:19:47 . 영천시는 인구 10만 미만이나 분만병원에 연 6억, 영남대 분원 응급실에 20억을 지원하는 반면, 국가 전체 권역응급의료 육성사업 예산은 228억에 불과하다 **보건복지위원회 2부 · 03:22:25** .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의 공공성 책임 강화와 국가 예산 대폭 확대를 촉구했다.

노인학대 사망 통계 부재와 취업제한 적용 누락 남인순 의원은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학대 사망' 항목이 없으며, 군포시 요양원 사망사건 피의자가 취업제한 적용을 받지 못한 사례를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회 2부 · 01:50:36** . 노인학대 신고는 5년간 37% 증가해 26,000건에 달하고 응급사례가 연 100여 건이나, 사망 여부가 분류되지 않아 통계 공백이 발생한다 **보건복지위원회 2부 · 01:51:12** . 복지부는 민간기관 수사권한 부재와 자연사·질병사 흔재를 이유로 통계 미작성을 설명했으나, 의원은 아동학대처럼 학대 사망 유형을 노인복지법에 신설하고 현황보고서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2부 · 01:52:20** .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심의 지연과 소송 결과 미공개 이달곤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피해 신청 57,000건 중 보상 9,499건(161억 원)에 비해 각각 43,000건이며, 소송 121건 중 질병청 패소 13건(인정 9건, 항소 4건)이 발생했으나 판결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회 2부 · 02:03:13 . 재심 신청 기한이 촉박한 상황에서 정보 부족으로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청장은 행정소송 결과 적극 공표는 기존 관행과 다르나 피해자 알리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심의 속도 관련 월 2회에서 3회로 확대를 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2부 · 02:04:16 , **보건복지위원회 2부 · 02:05:25** .

확진된 약속·자료제출·후속조치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방안을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제도와 추진하고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7:38:10** ,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 5권 3특 지역별 중장기 배치 계획을 국립암센터·지역암센터·국립대병원과 협의하여 수립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7:38:48** . 통합돌봄 시군구별 실태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하고, 수요 대비 공급 부족 분야와 원인을 파악하여 지자체에 피드백하겠다고 약속했다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6:24:48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기본급표 재산출, 처우개선위원회 안전 상정을 약속했으며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6:55:19**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로드맵을 제도혁신 TF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6:58:26** . 재난의료비 지불보증 병원별 청구 내역 전수조사 실시 및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약속했다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6:56:33** .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 지정기준 재검토 및 정책연구용역을 2026년 추진하고 **보건복지위원회 2부 · 01:49:30** , 온열질환 초과사망 및 의료이용 확정 분석 공표 체계 구축을 위해 통계청과 협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2부 · 02:08:04** .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소송 결과 적극 공표 및 심의 속도 향상 (월 2회→3회)을 약속했다 **보건복지위원회 2부 · 02:05:25** .

미해결 쟁점과 검증 필요사항

간담사(CSO) 계약서 98만건 전수조사 미실시 남인순 의원은 간담사(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병원 수익의 60%를 가져가는 사례가 있으나 98만건 계약서 분석 결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6:25:59** . 장관은 처음 하는 실태조사로 계약서 내용 표준화나 핵심 분석이 미흡했으며, 전산 등을 이용해 조사 방법을 강구하고 부정수급 가능성을 데이터 분석으로 선별하여 실태조사하겠다고 답변했으나 구체적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6:26:33 .

독감 고면역원성 백신 도입 절차 논란 백선희 의원은 질병청이 2024년 4월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고면역원성 백신을 5순위로 평가받고 도입 보류했으나, 2026년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 75세 이상 단계 도입을 보고했다며 전문위 재심의 없이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회 2부 · 02:09:07 . 청장은 전문위는 자문 성격이며 도입 결정은 행정청 권한이고, 이후 워크숍과 회의에서 지속 논의했다고 해명했으나

보건복지위원회 2부 · 02:10:15 , 의원은 공식 심의 없이 대통령 보고한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예산 확보 여부도 불투명하다

보건복지위원회 2부 · 03:18:12 .

자립준비청년 520명 연락두절, 안전 확인 체계 미흡 백선희 의원은 자립준비청년 520명이 연락두절 상태인데 5월 지침 개정 후 단 한 명도 찾지 못한 이유를 물었다 **보건복지위원회 2부 · 03:34:24** . 장관은 연락두절은 본인 회피 경우도 있으나 안전 확인이 필요하며, 경찰 협력과 음면통 연계 등을 통해 안전 확인 체계를 정교화하겠다고 답변했으나 구체적 실행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4.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감사 범위와 핵심 판단

2026년 10월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소영 장관이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소상공인 지원, 창업·벤처 활성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주요 정책을 보고했다 [산자중기위 전체 · 00:00:00](#). 위원들은 전통시장 활성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기술탈취 피해구제, 납품대금 연동제, 청년고용 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으며, 특히 전임 장관 시절 텔레그램방 운영과 비상계엄 직후 무더기 승진 논란,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강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산자중기위 전체 · 01:00:06](#), [산자중기위 전체 · 01:46:01](#), [산자중기위 전체 · 01:54:49](#).

감사는 중국 원전 방사능 유출 대응, 중소기업 정책자금 민간컨설팅 업체의 개인정보 유출, 모두의창업 플랫폼 개인정보 유출 및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LH 민간참여사업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의무 적용 문제, 스마트공장 고도화 방향, 거버넌스테크(GovTech) 산업 육성, 팀프레시 피해기업 지원, 플랫폼 수수료 부담, R&D 예산 환수 미흡 등 광범위한 정책 영역을 다뤘다. 장관은 대부분 항목에서 검토·개선 의지를 밝혔으나 구체적 이행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쟁점별 심층 분석

1. 청년창업사관학교 예산 전액 삭감 논란

허성무·정진욱 의원은 16년간 9,300명의 청년창업가를 배출하고 토스(이승건 대표) 등 유니콘 기업을 배출한 청년창업사관학교 예산이 내년 전액 삭감된 것을 지적했다 [산자중기위 전체 · 00:43:05](#), [산자중기위 전체 · 06:00:09](#). 장관은 "16년간 구축된 동문 네트워크는 수천억을 주더라도 다시 만들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명맥 유지 방안을 찾고 예산 국회에서 적극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산자중기위 전체 · 00:43:38](#). 위원들은 첫 프로젝트 성공률보다 7~8년 후 재도전 성공 사례가 많음에도 추적 조사가 부재하고, 생태계 기여도 중심의 성과지표 개발과 16년간 생애주기 추적 영역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산자중기위 전체 · 06:01:16](#), [산자중기위 전체 · 06:02:26](#). 장관은 생애주기 추적과 생태계 기여도 성과지표 개발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산자중기위 전체 · 06:03:33](#), 예산 삭감 결정의 근거와 복원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었다.

2. 모두의창업 사업 예산 전용 및 개인정보 유출

모두의창업 사업에 1차 628억 원, 2차 2,631억 원(추경)이 예산 전용되었으며, 5,000명의 이메일과 창업 아이디어가 유출되었다 [산자중기위 전체 · 06:08:11](#), [산자중기위 전체 · 06:09:15](#). 플랫폼 개발사(트리플로스) 선정 과정에서 중기부·창진원·신한은행이 '민간협력'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으나, 창진원이 신한은행에 업체명과 금액을 지정한 과업지시서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다 [산자중기위 전체 · 06:12:32](#). 계약 전부터 개발이 시작되었고, 유출 사고 후에도 동일 업체를 2차 사업에 재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자중기위 전체 · 06:14:12](#). 장관은 "두 개 업체를 추천했고, 단기간 구축을 위해 맥락을 이해하는 업체를 찾았다"며 네이버와의 관련성은 확인 결과 없다고 해명했으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신 차리겠다"고 답변했다 [산자중기위 전체 · 06:12:32](#). 예산 전용 경위, 개인정보 유출 책임 소재,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문제를 재조사하여 종합국감 전까지 보고하기로 약속했다 [산자중기위 전체 · 06:17:22](#).

3.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및 관리 부실

박성민·김오은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이 해외 고가 전자제품·와인 등 취지에 맞지 않는 품목 구매에 사용되고, 전통시장 협동조합 명의로 122억원 규모의 의심거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산자중기위 전체 · 01:58:43](#), [산자중기위 전체 · 02:01:15](#). 소상공인진흥공단의 현장 점검이 부실하고 구역외 거래 증빙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산자중기위 전체 · 02:06:08](#). 2025년 온누리상품권 사용액 중 전통시장 1조4천억 원, 골목형 상점가 1조2천억 원으로 주객이 전도되었으며, 골목형 상점가는 2,130개·점포 10만 개로 확대되었으나 전통시장 활성화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산자중기위 전체 · 08:48:34](#), [산자중기위 전체 · 08:49:05](#). 전통시장과 상점가 간 환급률 차등(5% vs 3%)도 불과 2%p에 불과하다 [산자중기위 전체 · 08:50:16](#). 장관은 온라인 전통시장몰 입점 품목 제한을 검토하고 국제청 협조 조사를 약속했으나 [산자중기위 전체 · 01:31:51](#), [산자중기위 전체 · 02:06:08](#), 골목형 상점가 확대 정책의 재검토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4. 기술탈취 피해구제 기금 조성 지연 및 신속 구제 미흡

김동우·송재봉 의원은 중기부와 공정위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던 기술탈취 피해구제 기금이 기획재정부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자중기위 전체 · 01:51:27](#), [산자중기위 전체 · 01:52:56](#). 기금은 소송지원·분쟁조정·자금지원 등을 포함하며,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개정 시 과징금을 기금에 담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산자중기위 전체 · 01:57:56](#).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건은 1심 평균 733일(약 2년) 소요되며, 2년 이상 사건도 증가 추세다 [산자중기위 전체 · 08:27:04](#), [산자중기위 전체 · 08:27:36](#). 기술탈취 신문고는 5단계 절차로 오히려 기존 2단계보다 복잡해졌고, 패스트트랙(7일 초동지원)과 달리 신문고는 평균 28일, 최장 47일 소요된다 [산자중기위 전체 · 08:29:00](#). 신문고 접수 98건 중 관계부처 배부

29건에 그쳤고, 산업부·공정위·국정원 배부는 한 건도 없다 [산자중기위 전체 · 08:34:21](#) . 장관은 국무회의 안전 상정을 검토하고 기재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산자중기위 전체 · 01:51:27](#) , 기금 조성 시기와 신문고 절차 간소화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5. 플랫폼 입점업체 과도한 거래비용 부담

박성민 의원은 온라인 쇼핑 입점업체가 월평균 매출 대비 약 20%를 수수료·광고비 등 거래비용으로 지출하며, 이는 소상공인 영업이익을 잠식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산자중기위 전체 · 07:42:10](#) , [산자중기위 전체 · 07:42:42](#) . 2026.9.21. 중기부·공정위 간담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상생협력법 등 입법 논의 외 즉각적 대책은 부재하다. 장관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외국법인이 끼어있어 통상이슈를 얘기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자국민의 경제적 안정과 보호를 위해 정부가 나서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답변했다 [산자중기위 전체 · 07:45:28](#) . 그러나 수수료 상한제, 광고비 투명화 등 구체적 규제 방안과 시행 시기는 제시되지 않았다.

주요 질의·답변과 입장 차이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논란

송재봉 의원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3년째 시행 중이나 주요 원재료 가격 10% 인상 시에만 적용되어 여러 원재료가 각각 7~8% 오를 경우 적용되지 않고, 중소기업들이 원가정보 제공 부담으로 미연동 약정을 체결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산자중기위 전체 · 01:33:01](#) , [산자중기위 전체 · 01:36:21](#) .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실효성이 부족하고 제재가 약하다. 발동 요건(원재료 10% 인상) 개선, 인센티브 도입, 자동 적용 제도 등 전반적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산자중기위 전체 · 01:37:36](#) , 10% 기준을 5~7%로 하향 조정, 노무비 확대, 지급기한 60일→30일 단축 등 구체적 개선안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검토하겠다"는 원칙적 답변에 그쳤다 [산자중기위 전체 · 07:27:38](#) . 국가계약법 연계 방안도 "비교해 보고 전자가도 나온 부분이 있다면 추진하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산자중기위 전체 · 01:40:43](#) .

LH 민간참여사업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의무 회피

LH가 민간참여 공공임대주택사업(2022년 356호→2026년 37,000호로 100배 증가)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의무(판로지원법)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LH는 "민간참여사업은 LH가 토지 제공, 민간이 건설을 담당하는 공동시행 구조로, 판로지원법상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급자재 적용 시 민간참여사업 근간이 흔들린다"고 주장했다 [산자중기위 전체 · 06:54:12](#) . 그러나 중기부는 공공기관 참여 시 판로지원법 적용 대상으로 해석하며, 중소기업 건설자재 구매율이 2022년 80%에서 2026년 67%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중기위 전체 · 06:52:26](#) , [산자중기위 전체 · 06:56:22](#) . 장관은 "국토부·중소기업중앙회와 협의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산자중기위 전체 · 06:59:05](#) , LH와 중기부 간 법 해석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지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중국 원전 방사능 유출 대응 이중 잣대 논란

의원은 중국이 2035년까지 원전 150기를 건설 예정이며, 2020년 기준 삼중수소 배출량이 일본의 6배(1,054 테라베크렐)에 달하고 친산원전은 후쿠시마의 9배를 배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본 오염수에는 강력 대응했으나 중국 원전에는 침묵하는 이중 잣대를 비판했다 [산자중기위 전체 · 04:50:48](#) , [산자중기위 전체 · 04:52:27](#) , [산자중기위 전체 · 04:54:01](#) . 장관은 "수산물 안전 검역은 특정 국가가 아닌 국민 우려 해소를 위해 시스템을 잘 운영해야 한다. 원전 사고수 방류와 일반 원전 배출은 다른 사안으로 이해된다"고 답변했다 [산자중기위 전체 · 04:54:01](#) . 대중국 원전 방사능 유출 대책을 국무회의 의제로 상정하고 외교부·해수부·농림축산부와 협력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종합국감 전까지 보고하기로 약속했으나 [산자중기위 전체 · 04:58:24](#) , 중국산 수산물 수입금지법 발의 촉구에 대해서는 직접적 답변을 회피했다.

확인된 약속·자료제출·후속조치

장관은 청년창업사관학교 명맥 유지 방안을 찾고 예산 국회에서 적극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자중기위 전체 · 00:43:38](#) . 공공배달앱 라이더 인센티브 개선 및 데이터 이동권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산자중기위 전체 · 00:42:04](#) ,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시 건강보험료 이중 부과 문제를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산자중기위 전체 · 00:58:30](#) . 전통시장 협동조합 122억원 의심거래를 국세청 협조 조사하고 종감 전 보고하며 [산자중기위 전체 · 02:06:08](#) , 텔레그램방 내용을 기록물로 관리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산자중기위 전체 · 01:01:12](#) .

정책자금 민간 컨설팅 업체의 중기부 로고 도용 및 개인정보 판매 사례를 AI 활용해 선제 적발하고, 중기부 통합 시스템을 민간 사이트 수준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산자중기위 전체 · 05:06:39](#) .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한도(5,000만 원) 증액, 지자체·TP 연계 자부담 경감 모델 확산, 데이터 표준화를 추진하고 [산자중기위 전체 · 07:05:04](#) , GovTech 규제자유특구 지정, 세종 GovTech 캠퍼스 조성, 아시아 허브 구축 방안을 행안부와 협의하여 검토하기로 했다 [산자중기위 전체 · 07:11:35](#) .

팀프레시 피해기업 연체자 상환 유예 조치를 검토하고 사업 전환 지원 자금 연계 방안을 마련하며 [산자중기위 전체 · 07:18:13](#) , 제넥신 강세찬 대표 관련 중기부 R&D 과제(팁스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산자중기위 전체 · 07:24:16](#) . R&D 사업 위반 607건, 환수 대상 547억 원 중 실제 환수액이

120억 원(22%)에 불과하고 246건은 환수가 전혀 안 된 문제에 대해 환수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기로 했다 [산자중기위 전체 · 08:53:31](#) ,
[산자중기위 전체 · 08:58:19](#) .

미해결 쟁점과 검증 필요사항

홈플러스 납품업체 정책자금 집행을 저조

홈플러스 납품·입점업체 대상 중기부 정책자금 1,400억 원 중 실제 집행액은 312억 원(22%)에 불과하다 [산자중기위 전체 · 08:03:29](#) ,
[산자중기위 전체 · 08:04:01](#) . 중진공 3.28%, 소진공 3.35% 금리가 팀업 사태 당시 긴급경영안전자금 2.5% 고정금리보다 높아 현장 반응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 장관은 "금리 영향이 있는 것 같다. 팀업 사태 때 금리로 맞춰달라는 요청이 있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산자중기위 전체 · 08:04:01](#) , 금리 인하 시기와 수준은 명시하지 않았다. 집행을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

시설자금 목적외 사용 적발업체 중복 지원

2026년 시설자금 목적외 사용 적발 40개 업체 중 25개가 87건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75억 원을 중복 지원받았다 [산자중기위 전체 · 07:53:06](#) ,
[산자중기위 전체 · 07:53:39](#) . 중기부는 중진공 적발업체 명단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정행위 업체 관리체계가 부재하다
[산자중기위 전체 · 07:56:18](#) . 장관은 중기부와 산하기관 간 부정행위 적발업체 리스트 공유 체계 구축 및 지원사업 선정 시 반영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산자중기위 전체 · 07:57:26](#) , 기존 중복 지원금 환수 여부와 향후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 일정은 불명확하다.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점검 주무부처 부재

2026.1.28.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중기부·과기정통부·복지부 모두 설치율 파악 및 정상 작동 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 [산자중기위 전체 · 08:38:19](#) , [산자중기위 전체 · 08:38:51](#) . 중기부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으로 2025년 1,055개, 2026년 1,105개 매장에 보급했으나 관리 현황은 미파악 상태다. 장관은 설치율 파악 및 정상 작동 점검 체계 구축을 약속했으나, 주무부처 지정과 점검 주기 등 구체적 이행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4.8. 외교통일위원회

감사 범위와 핵심 판단

2026년 10월 7일 남북회담본부에서 실시된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는 9월 21일 발생한 DMZ 지뢰 폭발 사고를 계기로 남북관계의 구조적 변화와 정부 대응의 적절성을 집중 점검했다 [외통위 전체 · 00:37:08](#).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제시한 '평화적 두 국가론'과 '북향민' 명칭 변경이 헌법 정신 및 북한이탈주민 정체성과 충돌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외통위 전체 · 00:40:44](#). 북한이 2023년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MDL 인근에 철책·지뢰·대전차 장애물을 설치하는 '남북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2028년까지 완성 목표로 추진하면서 MDL 침범이 2024년 9회에서 2025년 17회로 급증한 상황에서, 정전협정 체제의 실효성과 우발적 충돌 방지 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외통위 전체 · 02:33:49](#), [외통위 전체 · 08:08:03](#).

개성공단 피해기업 303개사의 실질 지원 부족(피해액 7,600억 원 중 2,800억 원만 지원), 통일교육위원 1만 명 확대 사업의 관리체계 미비, 북한 인권 보고서 비공개 전환 및 교육 콘텐츠 삭제 등 정책 현안도 다뤄졌다 [외통위 전체 · 01:49:11](#), [외통위 전체 · 08:39:21](#), [외통위 전체 · 09:06:32](#).

쟁점별 심층 분석

DMZ 지뢰 폭발 사고의 성격 규정 9월 21일 MDL 이남 10m 지점에서 북한이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이 발목 부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여야는 '도발'과 '사고'로 규정을 달리하며 대립했다 [외통위 전체 · 01:22:54](#). 야당은 "북한군이 우리 군을 다치게 하려고 심은 것이며, 625 때나 60~80년대 묻은 것이 아니라 최근 매설된 것"이라며 명백한 도발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통위 전체 · 01:19:41](#). 정동영 장관은 "의도성에 대해서는 최종 발표가 되지 않았으며, 지뢰 공격이라고 규정하면 왜 대응을 안 하냐는 압박이 생길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외통위 전체 · 01:22:54](#). 장관은 김대중 대통령이 서해교전 당시 단호하게 대응했으나 햇볕정책은 유지했던 사례를 들며 "도발에는 강력 대응하되 남북관계 긍정적 방향 모색은 병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외통위 전체 · 01:11:46](#). 사고 성격 규정을 둘러싼 입장 차이는 대북 제재 강화 여부와 직결되어 정책적 긴장을 야기했다.

평화적 두 국가론의 헌법 합치성 정동영 장관이 제시한 '통일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야당은 헌법 제3조(영토조항) 위반 소지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수용 우려를 제기했다 [외통위 전체 · 06:49:47](#). 장관은 "국가성 인정이지 국가 승인이 아니며, 외국이 아니라는 특수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외통위 전체 · 08:58:10](#), 야당은 "내부적으로 두 나라로 보느냐가 중요하며, 중국이 조선과 한국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외통위 전체 · 06:32:05](#). 장관은 "적대적 두 국가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은 특수관계를 인정하는 속에서 평화적 두 국가로 가야만 안정적 평화공존을 이룰 수 있다"며 "통일은 미래 세대가 선택하게 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통위 전체 · 08:58:10](#). 이 논란은 통일부의 궁극적 목표가 통일인지 평화공존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으로 이어졌으나, 장관은 "통일 지향"과 "평화공존"을 양립 가능한 것으로 제시하며 명확한 우선순위를 밝히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 명칭 변경의 정체성 논란 통일부가 '탈북민'을 '북향민'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박충권 의원 등 탈북민 출신 의원들이 강력 반발했다 [외통위 전체 · 07:32:36](#). "탈북민은 자유를 찾아 북한 체제에 반대하여 온 의지를 담은 용어인데, 북향민은 북한을 그리워하는 사람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외통위 전체 · 08:22:15](#). 정동영 장관은 "탈북자라는 호칭에 상처받는 분들이 많아 중립적 용어로 바꾼 것"이라며 25개 하나센터를 통해 32,000명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만 비율을 확인하고 다음 국회 때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외통위 전체 · 09:04:00](#). 그러나 의원들은 "법이 통과하지도 않고 명칭 변경도 안 됐는데 국정감사 속기록에 계속 북향민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외통위 전체 · 08:22:15](#). 명칭 논란은 단순 용어 문제를 넘어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선택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가치 충돌을 드러냈다.

남북 국경선 요새화와 정전체제 변화 북한이 2023년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MDL 인근에 철책, 지뢰, 대전차 장애물 등을 설치하는 '남북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2028년까지 완성 목표로 추진 중이며, MDL 침범이 2024년 9회에서 2025년 17회로 급증했다 [외통위 전체 · 02:33:49](#), [외통위 전체 · 08:08:03](#). 의원들은 "정전협정 체제와 정면 충돌하는 구조적 변화"라며 MDL 좌표 재확인, 군통신선 복원, 우발적 충돌 방지 체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 [외통위 전체 · 07:06:59](#). 정동영 장관은 "DMZ 관할권은 유엔사에 있으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는 대한민국에 보장되어야 하며, 역대 대통령들이 유엔에서 약속한 DMZ 평화생태공원화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문화·생태·관광·학술 등 접근권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외통위 전체 · 07:51:50](#). 장관은 "유엔사와 우리 군 당국이 MDL 좌표 관련 긴밀하게 협력해 왔고 이번 계기로 더 협력이 가속화될 것이며, 군통신선 복원을 위해 특별히 유념하겠다"고 약속했다 [외통위 전체 · 08:32:30](#). 그러나 북한의 일방적 요새화 작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실효적 대응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드러났다.

주요 질의·답변과 입장 차이

대북 제재와 NSC 내 이견 9월 지뢰 사고 이후 NSC에서 조현동 외교부 장관이 북한 사이버 해킹에 대한 독자 제재를 제안했으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연관성과 실효성이 약하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통위 전체 · 01:19:41](#) , [외통위 전체 · 06:32:05](#) . 장관은 "평화공존 정책과 제재는 양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야당은 "북한 사이버 해킹은 연간 수조원 규모의 국제 범죄로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반박했다 [외통위 전체 · 09:18:57](#) . 정부 내 대북정책 조율 과정에서 통일부와 외교부 간 입장 차이가 공개되면서 정책 일관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 형평성 개성공단 입주 303개 기업의 피해액 7,600억 원 중 보험금·대출 제외 실제 지원은 2,800억 원에 불과하며, 기업들이 813억 원 추가 지원을 요청했으나 통일부는 217억 원만 반영했고 이마저도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탈락했다 [외통위 전체 · 01:49:11](#) , [외통위 전체 · 07:12:41](#) . 고동준 의원은 "유동자산 90%, 투자자산 45% 지원 기준에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2004년 모든 것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전 재산을 투자한 애국자"라고 강조했다 [외통위 전체 · 01:54:56](#) . 정동영 장관은 "기획재정부를 설득하여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으나 구체적 이행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외통위 전체 · 01:54:56](#) .

통일교육 콘텐츠와 북한 인권 통일부가 2026년부터 북한 인권 보고서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중고등학생 대상 통일교육 표준강의안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독립 단원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통위 전체 · 09:06:32](#) . 대신 북한의 병원 건설, 평양 5만 세대 건설 등 체제 선전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북한 인권 개선 예산도 97% 삭감되고 민간단체 지원금은 제로가 되었다 [외통위 전체 · 09:26:44](#) . 장관은 "표준강의안은 교사용 참고용이며 북한 인권이 좋아져서 빠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내년도 표준강의안에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균형성과 객관성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외통위 전체 · 09:08:37](#) . 그러나 휴먼라이츠워치가 올해 세계 인권 보고서에서 현 정부가 인권 정책을 약화시켰다고 기록한 점이 지적되었다 [외통위 전체 · 09:26:44](#) .

확인된 약속·자료제출·후속조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5개 하나센터를 통해 32,000명 북한이탈주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북향민 명칭에 대한 불만 비율을 확인하고 다음 국회 때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외통위 전체 · 09:04:00](#) . 유엔사와 우리 군 당국의 MDL 좌표 관련 협력 가속화 및 군통신선 복원을 위해 특별히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외통위 전체 · 08:32:30](#) .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추가 지원 요청에 대해 기획재정부를 설득하여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외통위 전체 · 01:54:56](#) .

통일교육 콘텐츠를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한다"는 당위론에서 "한반도 평화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외통위 전체 · 06:24:47](#) . 내년도 표준강의안에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균형성과 객관성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외통위 전체 · 09:08:37](#) . 남북협력기금을 남북협력 계정과 평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향후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는 맹성규 의원 발의 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외통위 전체 · 09:03:25](#) . 백마고지-월정리 구간 9.3km 복원 사업을 내년 예산 237억 원으로 추진하고, 비적 구간의 선로 용량 확대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2028~2029년 말 복원 완료 목표) [외통위 전체 · 06:02:24](#) .

미해결 쟁점과 검증 필요사항

DMZ 지뢰 폭발 사고의 성격을 '도발'로 규정할 것인지 '사고'로 볼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대북 제재 강화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평화적 두 국가론이 헌법 제3조와 양립 가능한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어떻게 구별되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북향민 명칭에 대한 32,000명 전수조사 결과가 다음 국회에 보고될 예정이나, 법적 명칭 변경 절차와 당사자 의견 수렴 과정의 적절성은 계속 검증되어야 한다.

북한의 남북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2028년까지 계속될 경우 MDL 관리 체계와 우발적 충돌 방지 메커니즘이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불확실하다. 개성공단 피해기업 추가 지원 예산이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유동자산과 투자자산 지원 비율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후속 점검이 필요하다. 통일교육위원 1만 명 확대 사업의 신원 검증 절차와 활동비 지급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었는지, 리버스쿨 출신 등 문제 인사 필터링 체계가 작동하는지 확인이 요구된다 [외통위 전체 · 09:14:17](#) . 북한 인권 보고서 비공개 전환의 법적 근거와 내년도 표준강의안의 실제 개선 내용도 검증 대상이다.

4.9. 행정안전위원회

감사 범위와 핵심 판단

2026년 10월 7일 행정안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총 8시간 44분(31,449초 + 12,386초)에 걸쳐 선거관리 신뢰 회복, 소방안전 체계 개선,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핵심 판단은 **제도적 미비와 관리 부실이 중첩된 구조적 문제로** 수렴된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투표자 수 오입력 등 관리 부실이 발생했고 **행안위 전체 · 00:14:48**,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국민 신뢰를 훼손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행안위 전체 · 00:15:20**. 소방청은 표준 자체점검비 준수율이 평균 77.68%에 불과하고 **행안위 2부 · 02:04:56**, 국립소방병원은 개원 4개월이 지났으나 의사 13명이 부족한 상태다 **행안위 2부 · 02:16:44**. 인사혁신처는 소청심사위원회 인용률이 2022년 24.1%에서 2026년 38.1%로 급증했으나 원인 분석을 하지 않았다 **행안위 2부 · 02:59:43**.

쟁점별 심층 분석

1. 선거관리 신뢰 회복과 제도 개선

박주민 의원은 당선무효 판결 후 재판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가처분이 기각되고 보궐선거가 실시된 뒤 재판소원이 인용되면 동일 직위에 2명의 선출직 공무원이 존재하는 헌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위 2부 · 01:55:30**.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답변하며 **행안위 2부 · 01:57:43**, 현재 및 법원과 협의해 기준을 마련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속 결정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송파구 투표용지가 올림픽공원에 124일간 보관되며 '무법천지' 상태라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행안위 전체 · 05:19:19**. 특검 재검표 일정이 취소되고 선관위는 특검 요청 대기 중이라고 답변했으나, 국민 의혹 해소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행안위 전체 · 05:19:50**.

장애인 투표권 보장 문제도 쟁점이었다. 김혜지 의원은 시각장애인 점자 공보물에 누락·오류가 있고, 사전투표소 보조용구가 부족하며, 발달장애인 친화 투표용지가 미도입되었다고 지적했다 **행안위 전체 · 04:48:42**. 2심 판결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했으나 선관위가 상고하면서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 **행안위 전체 · 07:21:33**. 선관위는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①장애인 선거정보 접근성 조사 항목 포함 ②장애인 선거 접근성 모니터링 TF 구성 ③해외사례 조사 및 시범사업 계획 수립을 약속했다 **행안위 전체 · 04:58:39**.

2. 소방안전 체계의 구조적 취약점

양보남 의원은 전국 176개 소방청사의 표준 자체점검비 준수율이 평균 77.68%에 불과하며, 일부 소방서는 20.7%만 지급하는 반면 다른 곳은 150%를 초과 지급하는 등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행안위 2부 · 02:04:56**. 특히 국민안전체험관은 28.6%만 지급해 안전체험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행안위 2부 · 02:06:00**. 소방청장은 "표준 자체점검비가 의무 규정이 아니어서 편차가 발생했다"며 공공기관부터 의무화하는 법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행안위 2부 · 02:08:10**.

윤건영 의원은 리튬배터리 소화기 KFI 인증 시험이 케이스를 제거한 배터리로 진행되어 현실과 맞지 않으며, 업체가 직접 시험용 배터리를 가져와 조작 가능성이 있고, 인증정보 글씨가 3mm로 너무 작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행안위 2부 · 02:11:18**. 소방산업기술원장은 "네덜란드 기준을 참고했으며 확산 방지 효과는 있다"고 답변했으나 **행안위 2부 · 02:14:35**, 의원은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정춘생 의원은 국립소방병원이 2024년 6월 개원했으나 10월 기준 의사 13명이 부족하며, 특히 호흡기내과·내분비내과 등 소방공무원 핵심 진료과에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위 2부 · 02:16:44**. 또한 전국 소방전문치료센터와 건강 데이터 연계가 되지 않아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행안위 2부 · 02:18:21**. 소방청장은 서울대병원과 협의 중이며 내년부터 소방의학연구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답변했다 **행안위 2부 · 02:19:22**.

김혜지 의원은 최근 5년간 정신병원 화재 19건이 발생했으나, 폐쇄병동의 출입문 잠금 상태를 고려한 피난·대피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행안위 2부 · 01:58:45**. 화재 시 자동개방, 원격해제 등 안전장치와 개별 대피 지원 계획이 필요하며, 소방청이 복지부와 협의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안위 2부 · 02:01:32**. 소방청장은 마스터키 보유 및 훈련을 실시 중이며, 의료기관과 공유하겠다고 답변했다 **행안위 전체 · 02:03:15**.

3. 인사제도 개선과 공무원 처우

권영진 의원은 국가공무원 징계처분 소청 인용률이 2022년 24.1%에서 2026년 8월 38.1%로 급증했으며, 특히 금품수수(65.4%), 성비위(40%), 갑질(54.1%) 등 중대 비위의 인용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행안위 2부 · 02:59:43](#) . 의원은 원인 분석이 없었다고 비판하며, 인사혁신처가 감경사유를 데이터화해 원청 부처에 피드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안위 2부 · 03:02:28](#) . 처장은 종합감사까지 검토 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정연 의원은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79.5%가 주 40시간 근무를 희망하며, 62.3%가 이미 35시간을 채워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위 2부 · 02:54:40](#) . 99%가 5년 이상 숙련 인력이므로 본인 요구 시 40시간으로 확대해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안위 2부 · 02:55:50](#) . 인사혁신처장은 행안부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나 [행안위 2부 · 02:58:04](#) , 의원은 검토가 아닌 실행을 촉구했다.

주요 질의·답변과 입장 차이

선관위 재판소원 대응 공백 박주민 의원이 재판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절차 충돌 시 헌법적 문제를 제기하자 [행안위 2부 · 01:55:30](#) , 선관위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행안위 2부 · 01:57:43](#) . 의원은 "재판소원이 시행된 지 오래됐고 이런 케이스가 나올 것"이라며 사전 기준 마련을 촉구했으나, 선관위는 현재 법원 협의 후 대응하겠다는 사후적 입장만 밝혔다.

소방청 표준 자체점검비 편차 양보남 의원이 준수율 77.68%와 지역 간 10배 격차를 지적하자 [행안위 2부 · 02:04:56](#) , 소방청장은 "의무 규정이 아니어서 편차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행안위 2부 · 02:08:10](#) . 의원은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청장 답변에 동의하면서도, 법제도 개선 일정을 명확히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인사혁신처 소청 인용률 급증 권영진 의원이 원인 분석 여부를 묻자 [행안위 2부 · 02:59:43](#) , 처장은 "원인 분석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행안위 2부 · 03:02:28](#) . 의원은 "감경사유를 데이터화해 원청 부처에 피드백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처장은 종합감사까지 검토 후 보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확인된 약속·자료제출·후속조치

이행 주제	약속·조치	기한	근거 시각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행	재판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관련 현재·법원과 협의해 기준 마련 및 가이드라인 검토	기한 언급 없음	행안위 2부 · 01:57:43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행	특검과 주고받은 공문 일체 제출	기한 언급 없음	행안위 전체 · 05:19:19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행	①장애인 선거정보 접근성 조사 항목 포함 ②장애인 선거 접근성 모니터링 TF 구성 ③해외사례 조사 및 시범사업 계획 수립	국정감사 종료 전	행안위 전체 · 04:58:39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행	여론조사기관 반복위반 가중처분 기준 및 재등록 심사 강화 방안 마련	종합감사까지	행안위 2부 · 02:47:04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행	선거 현장에서 문제 제기된 법조항 정리 및 법 개정 방향 자료 제출	종합감사까지	행안위 2부 · 03:10:17
소방청장	표준 자체점검비 준수율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및 공공기관 의무화 검토	기한 언급 없음	행안위 2부 · 02:08:10
소방청장	국립소방병원 의사 조기 총원 및 내년부터 소방의학연구센터 구축	내년부터	행안위 2부 · 02:19:22
소방청장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화재 안전 기준 개선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해 종합감사까지 보고	종합감사까지	행안위 2부 · 02:03:15
소방청장	차세대 119 통합시스템 NIA 타당성 검토 완료 후 국회 증액 추진	2026년 10월	행안위 전체 · 04:26:33
소방청장	지역 간 처우 격차 극복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	종합감사 전	행안위 전체 · 08:09:13
소방청장	70cm 연장 구급차 도입 일정 및 보건복지부 협의 내용 보고	기한 언급 없음	행안위 전체 · 08:02:00

이행 주체	약속.조치	기한	근거 시각
소방청장	①감사담당관 개방형 전환 ②감찰 규정 개선(재적 사유 확대, 감찰심의위 구성 개선) ③2차 가해 방지 대책 포함	종합감사 전	행안위 전체 · 07:49:57
인사혁신처장	소청심사위원회 인용률 급증 원인 분석 및 감경사유 데이터화 방안 검토 후 보고	종합감사까지	행안위 2부 · 03:02:28
인사혁신처장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주 40시간 확대 방안을 행안부와 협의해 검토 후 보고	종합감사까지	행안위 2부 · 02:58:04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국정과제 이행 일정 및 방안 보고	종합감사까지	행안위 2부 · 03:23:10
인사혁신처장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의 취업심사 제한 면제 문제 개선 의견 제출	종합감사까지	행안위 2부 · 03:09:05
인사혁신처장	부처별 추천 기준 및 성과심사 기준 개선 방안을 서면 제출	종합감사 전	행안위 전체 · 08:17:02

미해결 쟁점과 검증 필요사항

선관위원장 공석 사태 노태학 위원장 사임 후 124일간 공석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행안위 전체 · 07:17:47](#) .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 지명을 하지 않아 위원장 호선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행안위 전체 · 07:18:23](#) . 헌법상 위원 중 호선이 가능하나 관례 존중 명분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행안위 전체 · 07:19:30](#) , 선관위는 대법원장의 지명을 기다리는 수동적 입장만 밝혔다. 헌법기관의 정상 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리튬배터리 소화기 인증 기준 윤건영 의원이 지적한 ①케이스 제거 상태 시험 ②업체 직접 배터리 제공 ③인증정보 3mm 글씨 문제 [행안위 2부 · 02:11:18](#) 에 대해 소방산업기술원장은 "네덜란드 기준 참고"라는 원론적 답변만 했다 [행안위 2부 · 02:14:35](#) . 실제 화재 현장에서 케이스에 싸인 배터리에 대한 소화 효과 검증이 필요하며, 인증 시험의 객관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소방공무원 처우 격차 국가직 전환 6년이 경과했으나 피복비 10배, 교육비 10.4배 차이가 지속되고 있다 [행안위 전체 · 08:06:22](#) . 소방청장은 "예산과 인사 구조가 여전히 시도지사 밑에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행안위 전체 · 08:06:54](#) , 국가직 전환의 실질적 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 예정인 격차 극복 방안 [행안위 전체 · 08:09:13](#) 의 실효성을 검증해야 한다.

5. 통합 이행 추적표

총 196건의 명시적 약속·자료제출·후속조치를 개별보고서에서 통합했다. 동일 문구·동일 시각의 중복만 제거했다.

5.1. 교육위원회 · 1~8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최교진 교육부 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초과세수분의 초·중등 교육 사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교육위원회 2부 · 01:51:09
최교진 교육부 장관	학교급식 납품업체 관리 강화를 위해 조달청 우수품목 지정제도 유사 시스템, 관계부처 합동 협의체,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3가지 제안을 검토하고 교육청·지방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교육위원회 2부 · 02:01:23
최교진 교육부 장관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해 상담교사를 늘리고 역량 강화 연수를 하며, 아이들과 상담할 시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위클래스 예산 등을 보완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교육위원회 2부 · 02:49:01
최교진 교육부 장관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국가 70%, 약 5천억 원)을 위해 교육부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교육위원회 2부 · 02:22:25
최교진 교육부 장관	학교폭력 가해자의 대입 기록 회피 편법 방지를 위해 법령 개정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의원실에 먼저 보고 후 함께 준비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교육위원회 2부 · 03:29:23
최교진 교육부 장관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 및 비상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접수번호 비순차화 등을 대학과 상의하여 검토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교육위원회 2부 · 03:38:06
최교진 교육부 장관	원서접수 대행사(진학사, 유웨이)의 데이터 활용 및 유료 서비스 판매 관련 의혹을 점검하고, 데이터 파기 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교육위원회 2부 · 03:59:22
최교진 교육부 장관	울산대 의대 인가지 위반 문제 및 BK21 사업 적정성을 검토하여 의원실로 보고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교육위원회 2부 · 02:43:37

5.1. 교육위원회 · 9~16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최교진 교육부 장관	수시 먹통 사태 관련 ①장관 일정·동선·보고 체계 ②캐리스 업무 법적 적법성 검토 ③국가배상 소송별 청구 내역 및 구상권 검토 계획을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	종합감사 전	교육위원회 1부 · 01:25:39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정시 원서접수 대비 ①매뉴얼 보완(마감일 당일 상황 포함) ②난수번호 발행 등 경쟁률 유출 방지 방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문서로 제출	종합감사 전	교육위원회 1부 · 01:40:07
최교진 교육부 장관	교육부·대교협·대행사 간 TF 구축, 원서접수 시스템 전반 재검토, 장애 대비 매뉴얼·전달체계·모의훈련 등 철저한 준비. 최종 경쟁률 공개 방식·시점 재논의	정시 원서접수 전(2027년 1월 4일)	교육위원회 1부 · 04:38:36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유웨이어플라이 특별조사 통해 장애 원인·미흡 조치·시스템 운영 문제 등 조사 후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기한 언급 없음	교육위원회 1부 · 04:38:04
최교진 교육부 장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행 상황 및 실적 보고	국정감사 종료 전	교육위원회 1부 · 01:11:24
최교진 교육부 장관	대전교육청 구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유료·무료 버전 보안 차이 등 전수조사 후 보고	기한 언급 없음	교육위원회 1부 · 01:33:55
최교진 교육부 장관	교원소청위원장 비위 의혹 관련 사실관계 파악 후 국회 보고	기한 언급 없음	교육위원회 1부 · 01:31:06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요청 자료 최대한 제출, 제출 못하는 사정은 별도 설명	오전 질의 종료 전	교육위원회 1부 · 01:01:05

5.1. 교육위원회 · 17~24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계획 등 업무보고 보완 서면 제출	오후 시작 전	교육위원회 1부 · 02:28:30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정보교사 연도별 확충 목표 수립, 종합감사 이전까지 국회 보고	종합감사 이전	교육위원회 1부 · 04:49:03
최교진 교육부 장관	대학 원서접수 공공 체계 전환, 빠르면 2028학년도(내년) 입시부터 적용 목표	2028학년도 입시	교육위원회 1부 · 05:32:38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정시모집 이전까지 원서접수 시스템 종합 개선대책 마련	정시모집 이전	교육위원회 1부 · 04:40:13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교원정책 (정보·AI 교원 확보 방안 포함) 반영, 이행 점검	기한 언급 없음	교육위원회 1부 · 04:48:32
최교진 교육부 장관	사립대 적립금 사용계획·금리 공시 및 국회 보고, 10년 이상 미사용 적립금 사유 확인	기한 언급 없음	교육위원회 1부 · 07:11:47
최교진 교육부 장관	특수학교 2030년까지 21개 설립 계획 차질 없이 추진	2030년	교육위원회 1부 · 04:51:14
최교진 교육부 장관	모듈러교실 입찰담합 의혹 교육청 감사 또는 교육부 직접 감사 검토	기한 언급 없음	교육위원회 1부 · 07:04:58

5.1. 교육위원회 · 25~26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이부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대표	채용 차별 재발 방지, 최근 채용(9월 16일 ~마감) 관련 자료 국회 제출	기한 언급 없음	교육위원회 1부 · 06:52:48
정재훈 틱톡 대표·하우웁 메타 부사장	학교폭력 영상 신속 삭제 체계 구축, 정부당국과 협의하여 새 규정 준수	기한 언급 없음	교육위원회 1부 · 06:57:20

5.2. 국방위원회 · 1~8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국방부 장관	군 정찰위성 추가 발사 계획 연도를 확인 후 보고	기한 언급 없음	국방위원회 2부 · 01:54:42
국방부 장관	비무장지대 관할권 행사 방안을 유엔사와 협력해 개선하고 필요 시 입법 검토	기한 언급 없음	국방위원회 2부 · 02:13:04
국방부 장관	지뢰 사고 군인 간병인 지원 방안을 다른 방안으로 보완하고 제도 개선 검토	기한 언급 없음	국방위원회 2부 · 02:29:50
국방부 장관	소형 정찰·자폭드론 사업 감사원 감사 청구 검토	기한 언급 없음	국방위원회 2부 · 02:28:49
국방부 장관	강제 징집 녹화사업(과거사) 진상조사단 설치 검토 후 종합감사 때 입장 보고	종합감사 시	국방위원회 2부 · 03:01:07
국방부 장관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법 시행령의 장교 보상 제외 문제 검토 후 종합감사 때 보고	종합감사 시	국방위원회 2부 · 02:59:23
국방부 장관	통합 국군사관학교 세부 방안을 조속히 정리해 국회 보고	빠른 시일 내	국방위원회 2부 · 02:58:40
국방부 장관	다문화 장병 통계 확인 및 관리 개선, 교육 강화	기한 언급 없음	국방위원회 2부 · 03:42:39

5.2. 국방위원회 · 9~16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국방부 장관	군 장병 대상 고금리 대부업 문제 관련 금융교육 강화 및 자율규제 협력	기한 언급 없음	국방위원회 2부 · 03:25:46
국방부 장관	약성 민원 대책으로 민원 전담 인력 배치 등 시범 운영 검토	기한 언급 없음	국방위원회 2부 · 03:52:12
합참	북한 MDL 일대 지뢰 매설 관련 정보 판단 경위를 다음 날(10월 8일) 합참 국정감사에서 상세 보고	2026년 10월 8일	국방위원회 2부 · 02:17:18
국방부 정책실장	광주 군 공항 이전 일정 단축 방안 재검토	기한 언급 없음	국방위원회 2부 · 03:06:04
강신철 국방부 장관	MDL 이남 북한 지뢰를 북한이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 제거 작전을 시행하겠다. 유엔사와 협의하여 추가 지역도 조사하고 제거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국방위원회 1부 · 00:18:00
강신철 국방부 장관	11월 SCM에서 FOC 검증 평가를 완료하고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건의하겠다. 한미가 긴밀히 협의하여 신뢰가 보장된 가운데 전작권 전환이 되도록 하겠다.	2026년 11월 SCM	국방위원회 1부 · 06:33:41
강신철 국방부 장관	병역특례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궁극적으로 폐지하겠다. 로드맵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국방위원회 1부 · 01:11:43
강신철 국방부 장관	소형정찰·자폭드론 획득 과정의 회의록, 참석자 명단, 보고문서 일체를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겠다. 감사 결과를 국회에 정식 보고하겠다.	국정감사 종료 전	국방위원회 1부 · 07:28:41

5.2. 국방위원회 · 17~22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강신철 국방부 장관	군의학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를 빨리 만들어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 다양한 방안을 구상 중이다.	기한 언급 없음	국방위원회 1부 · 08:04:26
강신철 국방부 장관	군무원 처우 개선(주택수당, 명칭 변경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국방위원회 1부 · 08:15:15
강신철 국방부 장관	국방부 공보라인의 답변 기준 매뉴얼을 만들고, '확인 후 답변' 사항을 리스트로 관리하여 실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국방위원회 1부 · 08:19:45
강신철 국방부 장관	초급지휘관 양성민원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검토하겠다. 국회 차원의 연구나 국방부 자체 조사 방안을 살펴보겠다.	기한 언급 없음	국방위원회 1부 · 00:58:24
강신철 국방부 장관	국방부 체력단련장 관리사장 채용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 개인정보는 비실명 조치하여 제출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국방위원회 1부 · 00:59:27
강신철 국방부 장관	광주군공항 이전 관련 주민 보상과 형평성 문제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해법을 연구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국방위원회 1부 · 08:09:47

5.3. 국토교통위원회 · 1~8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LH 구조적 손실에 대해 정부 재정당국과 함께 고민하고 지원 방안 검토	기한 언급 없음	국토교통위원회 2부 · 02:10:53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영일만 횡단대교 KDI 설득 및 지역사정 반영 노력, 해상노선 추진 검토	기한 언급 없음	국토교통위원회 2부 · 02:16:21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명일동 땅꺼짐 사고 추가 증거 검토 후 별도 보고	기한 언급 없음	국토교통위원회 2부 · 02:22:01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세종청무실 이전 관련 국토교통 분야 통치 인프라 종합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후 의원실 보고	기한 언급 없음	국토교통위원회 2부 · 02:51:25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동대구~포항 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포함 검토, 경제성·지역균형발전 고려	2026년 내 5차 국가철도망 수립	국토교통위원회 2부 · 04:22:54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미군 반환부지(캠프킴 등) 공공 개발 청년주택 공급, 용산공원 내 기존 건물 부지도 검토	기한 언급 없음	국토교통위원회 2부 · 03:55:36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건설 품질관리자 실명제·등록제 검토 도입, 겸직 금지 철저 관리, 초급 품질관리비 지급 검토	기한 언급 없음	국토교통위원회 2부 · 03:39:08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공항공사 재무구조 개선(여객이용료 현실화 등) 금융위 협의	기한 언급 없음	국토교통위원회 2부 · 03:49:41

5.3. 국토교통위원회 · 9~16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고속·시외버스 필수노선 지원 확대 및 경쟁력 강화 방안 검토 후 보고	조만간	국토교통위원회 2부 · 03:27:50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전세사기 피해자 신고 가능 사실 적극 홍보	기한 언급 없음	국토교통위원회 2부 · 02:54:40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공항·철도 리튬배터리 화재 대응 기준 마련 (반입금지 물품 명시, 전용소화기 배치 등) 소방청 등 협의	기한 언급 없음	국토교통위원회 2부 · 05:13:13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 미끄럼방지 포장 유지관리 지침 개정 (마찰계수 최소 기준 유지)	연내	국토교통위원회 2부 · 03:39:06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청년·신혼부부 비아파트→아파트 주거상향 추적관찰 영역 실시	기한 언급 없음	국토교통위원회 1부 · 05:21:11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와 도심공공복합사업 사전기획협의체 조속 개최, 연내 별도 보고	연내	국토교통위원회 1부 · 05:27:36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미청산 재건축·재개발 조합 전수조사, 현황·원인·완료예정 관리·공개	기한 언급 없음	국토교통위원회 1부 · 06:00:18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민간인 사찰 의혹 문건 확인 후 적절한 조치	기한 언급 없음	국토교통위원회 1부 · 01:23:13

5.3. 국토교통위원회 · 17~20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임낙코 현대건설 본부장	삼성역 철근누락 보강부위 하자담보책임 5년→10년 연장, 정밀안전진단 비용 부담, 문서화하여 의원실 제출	기한 언급 없음	국토교통위원회 1부 · 07:58:58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대한항공 마일리지 관리체계 관계부처와 논의	기한 언급 없음	국토교통위원회 1부 · 08:06:49
김세직 KDI 원장	인천 2호선 등 예타 관련 합리적 자료·근거 있으면 합리적 처리	기한 언급 없음	국토교통위원회 1부 · 08:34:05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공공노련 단식농성장 방문, 협의 내용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	종합감사 전	국토교통위원회 1부 · 08:52:54

5.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1~8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송미령 장관(농림축산식품부)	CPTPP 관련 산업부와 협조 강화 및 농업계 이해 대변	기한 언급 없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부 · 00:52:51
송미령 장관(농림축산식품부)	외국인 계절근로제 관련 산업인력공단과 협력 방안 검토 및 종합감사까지 자료 제출	종합감사(종감)까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부 · 01:05:51
송미령 장관(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결과 소팅 후 제도 개선·입법 정리 내용을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들에게 보고	종합감사(종감) 전까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부 · 01:37:11
송미령 장관(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착수 후 신규 위탁 3만99건 중 위반 의심 및 비농업인 필지 조사 후 종합감사까지 자료 제출	종합감사(종감)까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부 · 01:07:21
송미령 장관(농림축산식품부)	중국산 드론 소프트웨어를 국내산으로 교체	기한 언급 없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부 · 01:30:51
송미령 장관(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개선안(생산자 차액 보전, 바우처, 상한제 등) 구체적으로 보고	기한 언급 없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부 · 01:34:51
송미령 장관(농림축산식품부)	도축장 전기요금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해 한전 및 관계 부처와 협의	기한 언급 없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부 · 01:25:41
송미령 장관(농림축산식품부)	양돈 축사 현대화·악취 저감 시설 지원 강화 및 증축·병합 허용 등 적극 행정 추진	기한 언급 없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부 · 01:18:51

5.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9~16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송미령 장관(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업 자재 공시 제품 인정 기준 개선 및 국산 원료 공급 기반 확대 방안 검토	기한 언급 없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부 · 01:13:0
송미령 장관(농림축산식품부)	영농형 태양광 사업자(레스코) 평가 기준 강화 및 농협 참여 방안 마련	기한 언급 없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부 · 01:20:5
가축위생방역본부	방역 현장 사무소 남녀 분리 샤워실·화장실 미비 시설 개선 및 예산 지원	기한 언급 없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부 · 01:01:1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연금 지역별 선정 대기를 편차(전북 97%, 강원 21.6%) 개선 및 신청자 대비 배정 방식 검토	기한 언급 없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부 · 01:02:4
송미령 장관	농지 전수 조사 관련 특별조치법을 연내 제정하고, 일반 관행 위반은 양성화하며 투기 목적만 처벌하겠다	2026년 연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부 · 05:44:5
송미령 장관	농지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농지은행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국회와 협력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부 · 06:22:3
송미령 장관	농지 전수 조사 드론 보안 문제를 확인하고, 중국산 드론 사용 중단 여부를 검토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부 · 06:59:4
송미령 장관	CPTPP 가입 시 농업 전후방 파급효과, 중소농·지역별·품목별 영향을 분석하여 원점 재검토에 반영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부 · 07:00:0

5.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17~23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송미령 장관	브라질산 소고기 수입 관련 BSE 검사 자료를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고, 통보 지연 시 수입 즉각 중단하겠다	종합감사 전(10월 22일 이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부 · 07:42:1
송미령 장관	영농형 태양광 시행령의 주민참여협동조합 회원 의무 규정을 재검토하고, 절대농지와 일반농지 차등 적용 방안을 마련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부 · 07:39:0
송미령 장관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부담률 상향을 정부 내에서 적극 논의하고,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한 차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부 · 08:07:0
송미령 장관	축산업 구조개선 사업 세부 과제별 성과지표·목표·실적·미달 사유를 정리하여 종합감사까지 제출하겠다	종합감사 전(10월 22일 이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부 · 08:16:1
송미령 장관	AI 백신 상용화를 위한 질병청과의 다부처 협력 연구에 적극 참여하고, 10월 백신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겠다	2026년 10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부 · 08:25:0
송미령 장관	농협 개혁 추진단 회의록 및 구성 관련 자료 일체를 의원실에 즉각 제출하겠다	즉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부 · 08:36:0
송미령 장관	농지 전수 조사로 인한 혼란에 대해 준비 부족을 인정하고 농민들께 사과드리며, 현장 의견을 충실히 듣겠다	기한 언급 없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부 · 08:34:3

5.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8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최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페노메논 프로젝트 JYP와의 상표권 계약을 재정리하여 보고	기한 언급 없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부 · 07:42:39
최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편곡자 저작권료 분배 개선을 위해 음악저작권협회와 적극 협의	기한 언급 없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부 · 06:05:17
최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한축구협회 국제경기 승인 특혜 의혹에 대해 문체부 차원 조사 실시	기한 언급 없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부 · 07:46:48
최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및 보고	기한 언급 없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부 · 07:16:07
최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민체육진흥기금 활용 방안 마련 및 재정당국 협의 강화	기한 언급 없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부 · 07:39:32
최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백제 세계유산 관광콘텐츠와 종합전략을 국가유산청과 공동 수립	종합감사 이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부 · 07:49:55
최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예술강사 지원 사업 예산 확대 및 교육부 연계 학교 예체능 확대 방안 마련	기한 언급 없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부 · 08:56:34
이시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장	편곡자 권익 향상 TFT 운영 및 공청회 개최, 작곡가·작사가와 합의 도출 노력	기한 언급 없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부 · 06:04:50

5.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9~16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이120 리더북스 대표	웹소설 작가 수수료 및 할인을 구조 개선 검토	기한 언급 없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부 · 07:32:51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	페노메논 프로젝트 관련 국회 지적사항 반영, 민관협력 투명성 강화	기한 언급 없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부 · 06:43:05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청소년 언론 등록 제한 완화를 위해 해외 사례 조사 후 공론화하고 본격적으로 다루겠다.	기한 언급 없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부 · 01:30:58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암표 편법 거래 170명 수사 의뢰 완료, 해외 플랫폼 대책을 빨리 마련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부 · 01:34:5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중문화교류위원회-JYP 계약서를 재검토하고 해외 상표권도 정부 지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부 · 02:13:1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웹소설 실태조사(연말 완료 예정)와 공정위 협력, 표준계약서 마련을 추진하겠다.	연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부 · 01:46:26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예술인 강사 안정된 예산 확보를 위해 가을 국회에서 노력하겠다.	가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부 · 01:48:0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광화문 현판 한글 병기는 내년까지 광범위한 의견 수렴 후 방향을 잡겠다.	내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부 · 01:52:26

5.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7~22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민간자격증 실태조사를 뽑아서라도 실시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부 · 01:55:14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친일반민족행위자 서훈 11명 14점을 전수조사·재검토하고 행안부에 회신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부 · 02:02:44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준영정 고증 오류는 12월 새 심의위 구성 후 단계적 해결 방법을 찾겠다.	12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부 · 02:35:38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e스포츠 체육 포함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부 · 02:50:47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파크골프장 표준 모델 개발 연구를 12월까지 완료해 지자체에 배포하겠다.	12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부 · 02:18:4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뉴토끼 사건을 저작권법뿐 아니라 불법도박·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엄단하고 클라우드플레이어와 협의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부 · 03:04:28

5.6. 보건복지위원회 · 1~8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보건복지부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방안을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제도와 추진	기한 언급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7:38:10
보건복지부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 5권 3특 지역별 중장기 배치 계획을 국립암센터·지역암센터·국립대병원과 협의하여 수립	기한 언급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7:38:48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시군구별 실태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하고, 수요 대비 공급 부족 분야와 원인을 파악하여 지자체에 피드백	조만간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6:24:48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기본급표 재산출, 처우개선위원회 안건 상정	기한 언급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6:55:19
보건복지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로드맵을 제도혁신 TF를 통해 마련	기한 언급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6:58:26
보건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지불보증 병원별 청구 내역 전수조사 실시 및 부정수급 실태조사	기한 언급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6:56:33
보건복지부	의원급 사망사고 의무보고 확대, 반복위험 정보연계 체계 개선 계획을 종합감사 전 보고	종합감사 전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4:44:32
보건복지부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중 사회적 고립·돌봄공백 높은 가구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 후 의원실 보고	기한 언급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6:45:37

5.6. 보건복지위원회 · 9~16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보건복지부	비급여 진료 가격관리 및 건강보험 수가 원가 100% 수준 인상, 의학적 근거 없는 비급여 퇴출 방안 검토	기한 언급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6:20:24
보건복지부	간담사(CSO) 계약서 98만건 전수조사 실시 및 수수료율·건보청구 연계 분석	기한 언급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6:26:33
보건복지부	청년미래센터 표준 업무체계 확립 및 대상자 수에 따른 인력·예산 차등지원 방안 마련	기한 언급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8:01:42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임신부 지원금 결제방식을 국민행복카드 통합 방안 검토 후 보고	기한 언급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1부 · 08:22:10
보건복지부	아동돌봄 사업 정리·연계 및 명칭 통합 방안을 국무총리 주재 검토회의를 통해 마련	기한 언급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2부 · 01:45:12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희귀질환 지정기준 재검토 및 정책연구용역 추진(2026년)	2026년	보건복지위원회 2부 · 01:49:30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학대 사망 통계 포함 및 노인복지법 개정 검토	기한 언급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2부 · 01:52:20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 보호사 근거 마련 및 의료인력 기준 검토	기한 언급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2부 · 01:54:05

5.6. 보건복지위원회 · 17~24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보건복지부	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지역 분포 확대 계획 검토 및 예산 확보	기한 언급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2부 · 01:57:21
보건복지부	국립의학전문대학원(남원) 2026년 설계비·연구비 예산 확보 노력	2026년 국회 심의 과정	보건복지위원회 2부 · 01:58:58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종사자 교육연수 체계 및 전문연수 거점 조성 검토	기한 언급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2부 · 02:00:37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초과사망 및 의료이용 확정 분석 공표 체계 구축, 통계청 협의	기한 언급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2부 · 02:08:04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소송 결과 적극 공표 및 심의 속도 향상(월 2회→3회)	기한 언급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2부 · 02:05:25
질병관리청	독감 고면역원성 백신(75세 이상) 예산 확보 노력 및 기재부 협의	기한 언급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2부 · 03:18:12
질병관리청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순환비축 체계 마련 및 예산 확보	기한 언급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2부 · 03:14:26
보건복지부	장애인 통합돌봄 투트랙(자립지원· 거주시설) 강화 및 기본계획 반영	기한 언급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2부 · 02:54:27

5.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1~8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이소영 장관	청년창업사관학교 명맥 유지 방안을 찾고 예산 국회에서 적극 논의	기한 언급 없음	산자중기위 전체 · 00:43:38
이소영 장관	공공배달앱 라이더 인센티브 개선 및 데이터 이동권 확보 방안 검토	기한 언급 없음	산자중기위 전체 · 00:42:04
이소영 장관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시 건강보험료 이중 부과 문제를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개선	기한 언급 없음	산자중기위 전체 · 00:58:30
이소영 장관	기술탈취 피해구제 기금 조성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 검토 및 기재부와 협의	기한 언급 없음	산자중기위 전체 · 01:51:27
이소영 장관	납품대금 연동제 발동 요건 개선, 인센티브 도입 등 전반적 검토	기한 언급 없음	산자중기위 전체 · 01:33:01
이소영 장관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강화 문제를 금융위원장과 토론하여 우려 반영	기한 언급 없음	산자중기위 전체 · 01:56:16
이소영 장관	온라인 전통신장을 입점 품목 제한 방안 검토 및 보고	기한 언급 없음	산자중기위 전체 · 01:31:51
이소영 장관	전통시장 협동조합 122억원 의심거래를 국세청 협조 조사하고 종감 전 보고	종합감사 전	산자중기위 전체 · 02:06:08

5.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9~16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이소영 장관	텔레그램방 내용을 기록물로 관리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	기한 언급 없음	산자중기위 전체 · 01:01:12
이소영 장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시행 준비 만전 및 법원과 협력	2028년 시행 예정	산자중기위 전체 · 01:51:27
김우중 기획조정실장	관양업·서지영 의원 요청 자료를 오후 질의 전까지 제출	당일 오후 질의 전	산자중기위 전체 · 00:35:39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중국 원전 방사능 유출 대책을 국무회의 의제로 상정하고, 외교부·해수부·농림축산부와 협력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종합국감 전까지 보고	종합국감 전	산자중기위 전체 · 04:58:24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책자금 민간 컨설팅 업체의 중기부 로고 도용 및 개인정보 판매 사례를 AI 활용해 선제 적발하고, 과장 광고로 처벌. 중기부 통합 시스템을 민간 사이트 수준으로 개편	기한 언급 없음	산자중기위 전체 · 05:06:39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모두의창업 사업의 예산 전용 경위, 개인정보 유출 책임 소재, 플랫폼 업체 (트리플로스) 선정 과정의 투명성 문제를 재조사하여 종합국감 전까지 보고	종합국감 전	산자중기위 전체 · 06:17:22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LH 민간참여사업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의무 적용 여부를 국토부·중소기업중앙회와 협의하고, 상생 방안 마련	기한 언급 없음	산자중기위 전체 · 06:59:05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청년창업사관학교 16년간 배출 인력(만 명)의 생애주기 추적 용역 실시, 생태계 기여도 중심 성과지표 개발	기한 언급 없음	산자중기위 전체 · 06:03:33

5.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17~24건

이행 주제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한도(5,000만원) 증액, 지자체·TP 연계 자부담 경감 모델 확산, 데이터 표준화 추진	기한 언급 없음	산자중기위 전체 · 07:05:04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GovTech 규제자유특구 지정, 세종 GovTech 캠퍼스 조성, 아시아 허브 구축 방안을 행안부와 협의하여 검토	기한 언급 없음	산자중기위 전체 · 07:11:35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팀프레시 피해기업 연체자 상환 유예 조치 검토, 사업 전환 지원 자금 연계 방안 마련	기한 언급 없음	산자중기위 전체 · 07:18:13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제넥신 강제한 대표 관련 중기부 R&D 과제(팁스 등) 전수조사 실시, 예산 집행 오류 및 성과 부재 사례 점검 후 보고	기한 언급 없음	산자중기위 전체 · 07:24:16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납품대금 연동제 주요 원재료 기준(10%)을 5~7%로 하향 조정, 노무비 확대, 지급기한 60일→30일 단축 추진	기한 언급 없음	산자중기위 전체 · 07:27:38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악성 리뷰·노쇼 피해 범부처 정책대응반 활동 현황 확인 및 실태조사 결과 기반 대책 마련	기한 언급 없음	산자중기위 전체 · 07:34:43
중기부 장관	K방산티어 육성 방안 중 외국자본 지분·임원 심사, 혁신기업의 방산기술 보안·보안감사 대상 포함, 보안체계 공백 분석 및 개선 추진계획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	종합감사 전	산자중기위 전체 · 08:02:21
중기부 장관	은행 출연요율 0.04% 인상 검토 결과를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	종합감사 전	산자중기위 전체 · 07:50:23

5.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5~32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중기부 장관	시설자금 목적외 사용 적발업체(40개)의 중기부 소관 지원사업 선정 이력 및 지원금 수령 내역을 파악하여 의원실에 보고	기한 언급 없음	산자중기위 전체 · 07:57:26
중기부 장관	중기부와 산하기관 간 부정행위 적발업체 리스트 공유 체계 구축 및 지원사업 선정 시 반영 지침 마련	기한 언급 없음	산자중기위 전체 · 07:57:26
중기부 장관	R&D 예산 환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	기한 언급 없음	산자중기위 전체 · 08:58:19
중기부 장관	기술탈취 신문고와 패스트트랙 간 연계 시스템 개선 검토	기한 언급 없음	산자중기위 전체 · 08:31:00
중기부 장관	트리니티랩 운영 시 증여세·부가세 등 과세 문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기한 언급 없음	산자중기위 전체 · 08:12:32
중기부 장관	M&A 실사 클린팀 운영 및 표준계약서 제정 검토	기한 언급 없음	산자중기위 전체 · 08:19:46
중기부 장관	비수도권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한도 확대(200만→300만 원) 및 복지바우처 제도를 기재부와 협의	기한 언급 없음	산자중기위 전체 · 08:43:17
중기부 장관	생맥주 주세 20% 경감 제도 연장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	기한 언급 없음	산자중기위 전체 · 09:04:32

5.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33~34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중기부 장관	현장 간담회 참석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검토	기한 언급 없음	산자중기위 전체 · 07:52:01
중기부 장관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율 파악 및 정상 작동 점검 체계 구축	기한 언급 없음	산자중기위 전체 · 08:38:51

5.8. 외교통일위원회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정동영 통일부 장관	유엔사와 우리 군 당국이 MDL 좌표 관련 긴밀하게 협력해 왔고 이번 계기로 더 협력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군통신선 복원을 위해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기한 언급 없음	외통위 전체 · 08:32:30
정동영 통일부 장관	25개 하나센터를 통해 32,000명 북한이탈주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북한민 명칭에 대한 불만 비율을 확인하고 다음 국회 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국회	외통위 전체 · 09:04:00
정동영 통일부 장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추가 지원 요청에 대해 기획재정부를 설득하여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한 언급 없음	외통위 전체 · 01:54:56
정동영 통일부 장관	통일교육 콘텐츠를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한다'는 당위론에서 '한반도 평화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기한 언급 없음	외통위 전체 · 06:24:47
정동영 통일부 장관	내년도 표준 강의안에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학생과 국민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표준 강의안의 균형성과 객관성을 회복하겠습니다.	내년도	외통위 전체 · 09:08:37
정동영 통일부 장관	남북협력기금을 남북협력 계정과 평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향후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는 맹성규 의원 발의 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한 언급 없음	외통위 전체 · 09:03:25
정동영 통일부 장관	백마고지-월정리 구간 9.3km 복원 사업을 내년 예산 237억 원으로 추진하고, 비적 구간의 선로 용량 확대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2028~2029년 말 복원 완료 목표	외통위 전체 · 06:02:24

5.9. 행정안전위원회 · 1~8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행	재판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관련 현재·법원과 협의해 기준 마련 및 가이드라인 검토	기한 언급 없음	행안위 2부 · 01:57:43
소방청장	표준 자체점검비 준수를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및 공공기관 의무화 검토	기한 언급 없음	행안위 2부 · 02:08:10
소방청장	국립소방병원 의사 조기 총원 및 내년부터 소방의학연구센터 구축	내년부터	행안위 2부 · 02:19:22
소방청장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화재 안전 기준 개선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해 종합감사까지 보고	종합감사까지	행안위 2부 · 02:03:15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행	여론조사기관 반복위반 가중처분 기준 및 재등록 심사 강화 방안 마련	종합감사까지	행안위 2부 · 02:47:04
인사혁신처장	소청심사위원회 인용률 급증 원인 분석 및 감경사유 데이터화 방안 검토 후 보고	종합감사까지	행안위 2부 · 03:02:28
인사혁신처장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주 40시간 확대 방안을 행안부와 협의해 검토 후 보고	종합감사까지	행안위 2부 · 02:58:04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국정과제 이행 일정 및 방안 보고	종합감사까지	행안위 2부 · 03:23:10

5.9. 행정안전위원회 · 9~16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행	선거 현장에서 문제 제기된 범조항 정리 및 법 개정 방향 자료 제출	종합감사까지	행안위 2부 · 03:10:17
인사혁신처장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의 취업심사 제한 면제 문제 개선 의견 제출	종합감사까지	행안위 2부 · 03:09:0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군구 의결 후 중앙선관위 보고 시 반려·수정 권한을 규칙에 명시하도록 재검토	기한 언급 없음	행안위 전체 · 05:58:3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과 주고받은 공문 일체 제출	기한 언급 없음	행안위 전체 · 05:19: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①장애인 선거정보 접근성 조사 항목 포함 ②장애인 선거 접근성 모니터링 TF 구성 ③해외사례 조사 및 시범사업 계획 수립	국정감사 종료 전	행안위 전체 · 04:58:39
소방청	NIA 타당성 검토 완료 후 국회 증액 추진	2026년 10월	행안위 전체 · 04:26:33
소방청	지역 간 처우 격차 극복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	종합감사 전	행안위 전체 · 08:09:13
소방청	70cm 연장 구급차 도입 일정 및 보건복지부 협의 내용 보고	기한 언급 없음	행안위 전체 · 08:02:00

5.9. 행정안전위원회 · 17~18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소방청	①감사담당관 개방형 전환 ②감찰 규정 개선(재적 사유 확대, 감찰심의위 구성 개선) ③2차 가해 방지 대책 포함	종합감사 전	행안위 전체 · 07:49:57
인사혁신처	부처별 추천 기준 및 성과심사 기준 개선 방안을 서면 제출	종합감사 전	행안위 전체 · 08:17:02

부록 A. 분석 대상 및 데이터 품질

상임위원회	구분	영상 ID	전사 방식	분량	구조화 결과
교육위원회	2부	aEGvhaSlozs	Whisper 전사	4시간 13분 · 1,838구간	쟁점 8 · 문답 12 · 약속 8
교육위원회	1부	RtYeXtRu6aY	Whisper 전사	8시간 46분 · 4,818구간	쟁점 23 · 문답 32 · 약속 18
국방위원회	2부	0wyf2SrQc8c	Whisper 전사	3시간 56분 · 1,750구간	쟁점 8 · 문답 12 · 약속 12
국방위원회	1부	RblPlxnnv-4	Whisper 전사	8시간 41분 · 5,495구간	쟁점 6 · 문답 10 · 약속 10
국토교통위원회	2부	CLbmc7RIKsY	Whisper 전사	5시간 21분 · 2,239구간	쟁점 8 · 문답 10 · 약속 12
국토교통위원회	1부	nCAVxaqGiVM	YouTube 자막	8시간 53분 · 8,668구간	쟁점 8 · 문답 12 · 약속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부	5vkmTfuK83U	YouTube 자막	1시간 48분 · 1,458구간	쟁점 8 · 문답 10 · 약속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부	tH5Jpqaeoys	YouTube 자막	8시간 37분 · 8,889구간	쟁점 8 · 문답 12 · 약속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부	Ay-Jaj1QnN8	YouTube 자막	9시간 2분 · 9,840구간	쟁점 8 · 문답 10 · 약속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부	ZSQxcIQFZjw	Whisper 전사	3시간 27분 · 1,454구간	쟁점 8 · 문답 12 · 약속 12
보건복지위원회	1부	JF0ckKoauwE	Whisper 전사	8시간 32분 · 5,174구간	쟁점 8 · 문답 10 · 약속 12
보건복지위원회	2부	UPNVOKuk8_M	Whisper 전사	3시간 57분 · 1,708구간	쟁점 8 · 문답 11 · 약속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단일 영상	T2ELWVQ8WU0	Whisper 전사	9시간 6분 · 4,787구간	쟁점 23 · 문답 34 · 약속 34
외교통일위원회	단일 영상	DSbiNDvbOfU	YouTube 자막	9시간 46분 · 10,237구간	쟁점 8 · 문답 0 · 약속 7
행정안전위원회	2부	n6YMI-qmZbw	Whisper 전사	3시간 26분 · 1,300구간	쟁점 8 · 문답 10 · 약속 10
행정안전위원회	단일 영상	pBYvFHS0K-0	Whisper 전사	8시간 44분 · 4,449구간	쟁점 8 · 문답 0 · 약속 8

해석 기준과 한계

- YouTube 자막과 Whisper 전사는 발원자 식별, 동음이의어, 숫자·고유명사에서 오류가 날 수 있다.
- 본문은 질의자의 문제 제기와 피감기관 답변을 구분해 요약했으며, 어느 한쪽의 주장을 확정 사실로 간주하지 않는다.
- [영상ID HH:MM:SS] 는 각 원본 영상 내부 시각이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 원본 영상과 국회 공식 회의록을 대조해야 한다.